第93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1997年3月19日(水) 午前10時

議事日程
1. 서울市政및敎育行政에關한質問

附議된案件
1. 서울市政및敎育行政에關한質問 ... 9面

(10時 13分 開議)
○議長 文一權;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特別市議會 임시회 제2차 本會議를 개의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두 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李達源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達源 議員; 존경하는 文一權 議長,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趙淳 市長 및 劉仁鍾 敎育監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文化敎育委員會 소속 노원구 출신 李達源議員입니다.
本議員이 오늘 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의 주제는 중·고등학교 학교급식에 대한 조속한 실시와 자치구의 관할구역 내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 허용에 관한 것입니다.

趙淳 市長님을 비롯해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선출직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선출직은 유권자들로부터 민의의 대변자로서 임무와 권한을 부여받고 그 직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선출직은 민의가 요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학부모인 지역주민의 가장 큰 요구 중의 하나가 바로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학교급식의 문제입니다. 학교급식은 金泳三 大統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趙淳 市長님의 공약이면서 아울러 우리 서울市議員, 區廳長, 심지어는 區議員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저 위의 大統領을 비롯해서 저 밑의 區議員까지 포함한 모든 선출직이 학교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학교급식은 학부모들의 절실한 바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여기에서 학교급식의 필요성을 새삼스럽게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당시 법이나 제도나 교육재정으로 보아 급식은 기초자치단체의 소관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행정기관이 광역자치단체의 市·道敎育廳이고, 또한 재정지원은 敎育部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난날 區廳長 후보나 區議員 후보가 학교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야말로 무지의 소치거나 부화뇌동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5년, 96년 해마다 市議會 예산심의 때면 항상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이 바로 이 학교급식 예산편성이었습니다.

이제 본의원이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학교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학교급식을 전체적으로 실시하는데 있어 재원조달 문제를

비롯해 학교별로 시설공간을 확보하는 문제, 급식을 누가 책임지고 할 것인지, 또는 미비한 學校給食法 문제 등 장애요인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법·제도적으로 많은 부분이 해결되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敎育廳을 비롯한 일선 敎育區廳과 學校間에 긴밀한 협조만 이루어진다면 학교급식은 매우 쉽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분명한 전제는 각 기관간의 원활한 협조입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만만히 진행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징조가 벌써 드러나고 있기는 합니다. 소위 부자 區라고 하는 江南區가 地方敎育財政交付金法의 施行令인 市·郡및自治區의敎育經費補助에關한規程에 근거해 관내학교에 컴퓨터 설치와 시설보수경비를 지원하려다 市의 승인을 받지 못해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난날 大田市 儒城區의 학교급식비 지원을 둘러싸고 일어난 여러 갈등에 대해 익히 아시리라고 봅니다. 급식비 예산집행을 거부한 儒城區 總務局長이 해임되고 內務部의 사주를 받은 大田市는 儒城區廳의 예산승인을 거부하고, 監査院이 儒城區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이에 맞서 학부모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등교거부를 결의하는 등 기초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예산지원 문제가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자치단체에 적용되는 內務部의 豫算編成指針을 둘러싸고 敎育部와 內務部間에 첨예한 대립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에 敎育部는 고심끝에 기초자치단체도 학교급식비를 비롯해 각종의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地方敎育財政交付金法의 개정과 이

법의 시행령인 市·郡및自治區의敎育經費補助에關한規程의 제정입니다.

그 동안 기초자치단체는 地方敎育財政交付金法 제11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는 시·도의 교육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라는 조항에 묶여 관내학교에 대한 지원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급식 시설비 지원 역시 이 조항에 걸려 성사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주목을 받았던 大田市 儒城區의 급식비 지원문제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적인 제약조건이 법령개정을 통해 전부 해소된 것입니다.

敎育部가 95년 12월 29일 地方敎育財政交付金法을 개정하여 즉, 제11조제5항에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개정한 것입니다. 아울러 96년 4월 19일자로 大統領令인 市·郡및自治區의敎育經費補助에關한規程을 마련해 기초자치단체장이 실질적으로 관할구역 내의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11조제5항 단서조항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은 광역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해 놓았습니다. 바로 이 단서조항에 근거해 그 동안 大田市 儒城區 문제와 최근의 江南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한편, 學校給食法 또한 96년 12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어 마침내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학교급식 경비지원

에 관한 법적인 문제는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각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中央政府와 廣域自治團體, 基礎自治團體間에 과연 적절히 재원분담이 될 것인가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基礎議會나 基礎自治團體長이 교육경비에 대한 예산을 재정여건을 고려치 않거나 사업 우선순위에 맞지 않게 선심성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각 지역특성에 맞추어 교육투자를 하겠다는 지방자치의 고유정신을 무조건 배척할 수 없는 것만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廣域自治團體長과 基礎自治團體長間에 상당한 정도의 논란거리로 앞으로 대두되리라고 봅니다.

大田市 儒城區가 이 문제를 촉발시킨 당사자였습니다. 儒城區는 거듭되는 공방전 끝에 마침내 올 1월 9일 大田市의 승인하에 학교급식비 10억원을 관내 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의 보완에 따라 仁川 南洞區議會 역시 地方自治團體로는 처음으로 96년 11월 29일 大法院으로부터 學校給食施設支援에관한條例 제정을 인정받았습니다. 南洞區廳이 區議會를 상대로 大法院에 낸 學校給食施設支援에관한條例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이 기각되었던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地方敎育財政交付金法施行令인 市·郡및自治區의敎育經費補助에관한規程에 의해 基礎自治團體가 관내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本議員이 판단하기에 보조사업의 범주와 관련해 廣域自治團體와 基礎自治團體間의 갈등은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江南區가 대표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급식 경

비지원에 있어서는 行政官廳間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학교급식은 관내 지역민들의 시급한 요구사항이기도 하면서 서울市側으로서는 趙淳 市長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敎育廳으로서는 재원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급식문제에 있어서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劉仁鍾 敎育監님과 趙市長님, 향후 市·郡및自治區의敎育經費補助에관한規程을 둘러싼 논란을 유념하셔서 地方自治時代에 걸맞는 지역단위의 교육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本議員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다음은 李成浩 議員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成浩 議員; 안녕하십니까? 都市整備委員會 소속 李成浩 議員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 定期會 때 市政質問時에 敎育監님께 질문했던 獨立門初等學校에 대한 대책이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전혀 진척이 없다는 점입니다.

지난번 定期會 때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獨立門初等學校의 현황은 건물이 일제시대 때 지은 건물입니다. 불량하고, 노후되었고, 또 비좁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현재 그 지역의 1/3만은 그 학교의 학군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西大門區 鞍山初等學校로 많이 가고 있고요. 또 인왕산 넘어서 梅洞初等學校로 가는 등 불합리하게 되고 있는 것이 학교가 불량하고, 노후되고, 좁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재개발이 진행중입니다. 1,558세대를 지을 예정으로 되어 있고, 또 인근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중입니다. 반절 이상 진척되었는데 예상컨대 1,000세대 가량이 기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무악연립이 있는데 그것 또한 현재 800세대 정도인데 1,500세대 건축계획을 가지고 60% 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향후 인구집중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獨立門初等學校의 학생 수용대책은 진작 수립되었어야 할 사안입니다. 마땅히 재개발구역 지정시에 학교용지가 좁다라고 한다면 그 때 공공시설로 무상으로 확보할 수도 있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 때 中部敎育廳 의견은 의견 없음이라는 회신자료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역은 수십 년 동안 학교문제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한 동네에 살면서 서로 다른 세 학교에 다녀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초 제가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매달리고 나서 지난 定期會 때 도저히 그 동안의 中部敎育廳 업무자세나 태도로 봐서 이 문제에 진지하게 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本廳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나서 줄 것을 촉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敎育監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그 동안 中部敎育廳에서 되풀이해 온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답변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충질의를 통해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종합대책을 수립한다고 했고, 이후에 저한테 보고한다고 했었습니다.

제가 中部敎育廳과 연락을 취했을 때 이미 보고서가 本廳으

로 전달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보고서에 대한 자료제출에 대해서 정식 자료제출요구를 해서 보라는 답변이었고, 그래서 정식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本廳에 이미 자료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 만기일인 15일이 지난 시점, 다시 말해 지난 2월 臨時會 마지막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敎育監님과는 귀빈실에서 얘기를 나누었고, 또 그 뒤에 本廳 管理局長님과도 만나서 얘기를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 어떻든 현재와 같은 불합리한 학군, 그 이유가 학교가 좁고 낡아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향후 인구가 집중될 것을 예측한다라면 분명한 학교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요지였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中部敎育廳 管理局長과 그 직원들, 그리고 本廳에서는 係長이 나오셔서 주민과 저 이렇게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설명한 내용 또한 지난 1년 동안 해 왔던 내용과 같습니다. 주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질책도 많이 있었습니다. 현실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토록 지난번 定期會 때 제가 가능한 예의를 갖추어서 충분히 그 사유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천백만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敎育監님, 그리고 本廳·中部敎育廳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敎育監님께서는 현재의 학군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현재 鞍山初等學校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학교가 포화상태가 되고 있는 실정일 텐데 그것과 더불어서 현재 학군이 불합리한지 안한지, 불합리하다면 제가 지적하는바 협소·노후·불량한

것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뭔지, 두번째로는 현재 학교를 그대로 두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中部敎育廳이 그 동안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제가 조사한 자료보다도 부실했다는 것이 지난번 定期會 때 저의 지적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제가 아는 회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문제나 기타를 뽑아본 바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부실합니다.

그 동안 中部敎育廳의 업무자세가 타당하고 옳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난 定期會 때 저의 지적을 받고 敎育監께서 지난 3개월 동안 취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후 獨立門初等學校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일정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敎育監님께서 직접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서울市政및敎育行政에關한質問

(10時 30分)

○議長 文一權;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市政 및 敎育行政에 관한 質問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이번 제93회 臨時會에서는 하루 동안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분 議員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여섯 분 議員의 질문을 모두 마친 후 執行部側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議員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執行部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生活環境委員會 소속 禹元植 議員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元植 議員; 존경하는 文一權 議長,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趙淳 市長과 劉仁鍾 敎育監을 비롯한 執行部 關係公務員 여러분, 시정발전을 지켜보는 기자, 방청 시민 여러분, 노원구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禹元植 議員입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최근 다이옥신 초과배출문제로 가동 중단되었던 상계소각장이 오늘부터 재가동에 들어갔음을 먼저 議員님들께 보고드립니다.

밀실행정과 강제착공, 시위와 연행, 구속 등 불신과 대립으로 치달았던 상계소각장이 이제 비로소 서울市와 주민 사이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재가동에 들어간 것입니다.

서울市는 자존심을 꺾고 가동 중단과 보완 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은 쓰레기 대란을 피하기 위해 쓰레기를 소각장으로 반입했을 뿐 아니라 보완공사에 대해 서울市를 믿고 가동조건 합의에 따라 재가동에 동의한 것입니다. 불신과 대립으로부터 신뢰와 합의로 서울市와 주민간의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민선자치시대의 승리이자 환경문제를 둘러싼 집단민원을 해결해 가는 모범적 사례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연한 태도를 보인 주민대책위의 결정도 돋보였고, 어려운 가동중단 결정을 내려 주신 趙淳 市長님께도 찬사를 보냅니다. 金熙完 政務副市長, 卓秉伍 環境管理室長 정말 수고하셨

습니다. 특히 임시협약서 체결에서부터 가동중단, 재가동에 이르기까지 30여 차례의 회의를 인내를 갖고 협상해 주신 辛金柱 企劃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로서도 이번 협상과정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本議員은 오늘 그간 서울市 쓰레기 정책의 문제점 및 그 대안, 그리고 2000년을 바라보는 서울市의 심각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의 건설이라는 우리 시대의 주된 과제에 접근하기 위해 지자체의 가장 큰 골치덩어리의 하나인 쓰레기 문제를 보는 입각점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쓰레기도 에너지입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대량쓰레기 배출을 특징으로 하는 에너지 다소비형 사회에서 하나뿐인 우리의 서울을 환경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하여 에너지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는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순환시켜 에너지의 손실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구의 환경적 보전은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쓰레기는 주요한 에너지로서 이의 감량과 재활용을 폐기물처리에 있어 첫째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本議員의 생각인데 이에 대한 市長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6월 서울市가 발행한 Seoul Green Plan 21이나 서울市 環境管理室의 각종 보고서에서는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사업을 화려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청소예산 중 감량재활용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95년에는 총 823억 9,994만원 중 10억 3,800만원으로 1.2%, 96년에는 총 715억 725만 7,000원 중 13억 500만원으로 1.8%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김포매립지 주민대책위의 음식물쓰레기 반입거부라는 시련을 겪고 획기적인 대책을 세웠다는 97년 역시 43억 7,767만원의 재활용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천백만 인구가 거주하는 거대도시 서울市의 규모에 이러한 예산배정은 감량 재활용에 대한 서울市의 의지를 쉽게 살펴볼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예산배정이 서울市 폐기물 정책의 기본방향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市長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서울市의 재활용에 대한 소극적 태도는 예산뿐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구내, 연금매점에 재활용 제품 등을 판매하는 환경상품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하라는 國務總理訓令이 이미 94년 5월 24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市 공공기관 43군데 중 현재 환경상품 판매장소는 모두 11곳에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설치된 곳도 판매장이 2㎡에서 15㎡로 아주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市의 공공기관조차 재활용품에 대한 태도가 이럴진대 어떻게 경쟁력이 취약한 환경상품의 소비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재활용품 분리에 있어 서울시민의 큰 불만중의 하나는 분리를 해 놓아도 섞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리된 재활용품이 상품으로 가치가 없기 때문이겠지요.

재활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재활용산업의 경쟁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재활용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재활용 공장들의 영세성, 수거, 운송 등의 높은 원료비 등

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市는 소각공장 건설에는 한 개소당 수백억의 예산을 들이면서 재활용 산업에 대한 지원은 95년, 96년에 각 5억, 97년 20억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재활용기반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분리된 재활용품은 섞어 가져가고 그나마 수집된 재활용품은 집하장에 적체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활용품 적체현황을 보면 96년 10월에는 1만 1,834톤이었던 것이 5개월이 지난 97년 2월에는 무려 두 배가 넘는 2만 3,737톤에 이르고 있어 재활용산업의 어려움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재활용 통계 역시 엉망입니다. 서울市는 폐기물 처리의 중간지표를 발표하면서 96년 재활용 양은 1일 4,210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30.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까지는 1일 4,550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3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 자체가 거의 계근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과학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전체 수집분의 92%를 차지하는 민간부분은 정기적 보고의무조차 없기 때문에 전혀 신뢰할 수 없는 허수입니다.

서울市는 폐기물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를 감량, 재활용에 두고 있으나 예산에서도, 재활용상품 판매에서도, 재활용산업에 대한 지원에서도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재활용 통계도 엉망이고 재활용품의 적체도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적으로 적절한 폐기물의 순환적 처리를 위해 재활용품의 수집 운반에서부터 재활용산업의 지원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市長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서울市 環境管理室이 제시한 소각장의 연차별 건설목표를 보면 도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2000년까지 7,967억원을 들여 서울市內 12개소 총 9,750톤의 소각장을 착공하고, 2001년 이후에 또 5개소의 소각장을 추가 착공할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市는 2001년 이후에는 대략 추정하면 1만 3,000톤에서 1만 4,000톤의 소각용량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비는 대략 1조원 남짓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本議員이 이 계획을 받아보고 첫 느낌은 참으로 황당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서울市의 소각계획은 서울市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 즉, 재활용 쓰레기를 포함하여 심지어 불연성 쓰레기까지 모두 태우겠다는 발상입니다. 서울市의 폐기물 처리 중간지표를 보아도 97년 쓰레기 발생량은 재활용품을 포함하여 1만 3,600톤이고 2001년에는 1만 3,000톤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1일 1만 3,000톤에서 1만 4,000톤의 소각장을 건설하겠다는 서울市의 계획은 참으로 무리한 계획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둘째, 지난 93년 12월부터 94년 2월까지 監査院이 서울市의 쓰레기 소각정책에 대해 감사를 벌인 바가 있습니다. 이때 監査院은 서울市의 소각장은 1일 4,435톤의 규모가 적정함에도 서울市가 지나치게 과다책정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趙淳 市長님, 監査院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비용량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재활용쓰레기까지 모두 태워야 할 정도의 과대한 쓰레기 소각장의 건설계획이 강행 추진되는 이유에 대해 本議員은 정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市長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서울市의 소각중심 정책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있어 몇 가지의 큰 오류를 갖고 있다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하여 혼합쓰레기 중 음식쓰레기의 함량이 아주 높고 수분도 많아 혼합쓰레기의 열량이 아주 낮은 저질 쓰레기이기 때문에 소각장 운영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미 木洞, 一山에서 한겨울과 한여름철에 가동중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 소각정책과 재활용정책은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각 위주 정책은 쓰레기 재활용기반을 붕괴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역으로 논하면 가연성 쓰레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이 본격화되면 이미 소각장 건설에 소요된 엄청난 예산을 집행한 서울市는 예산낭비라는 이유로 국민의 지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에너지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사용하다 남은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순환시켜 다시 활용하는 것이 지구환경 보전의 첫걸음임을 감안할 때 음식물 쓰레기의 소각 매립은 쓰고 남은 에너지를 다른 보조연료라고 하는 에너지로 파괴하는 에너지의 이중파괴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쓰레기가 1년에 4조원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고, 이들 농산물의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에 달하는 인류가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음식물쓰레기의 소각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에너지의 파괴는 환경적 차원뿐 아니라 도덕적 차원에서도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넷째, 소각정책은 쓰레기 문제만 해결하려는 것이지 환경문

제를 통합적으로 보지 못한 단견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대기오염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이 때 소각장의 과다한 규모로의 무리한 강행은 이러한 노력과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본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市長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낳고 있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노원에는 소각장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 건설반대라는 소아적 운동이 환경운동으로 승화되어 가면서 여성민우회라는 단체가 중심이 되어 염분없는 조리전 음식물쓰레기만을 말려서 모아 팔당상수원의 유기농업지역으로 보내는 운동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2,000세대가 참여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에는 2만 5,000세대가 참여하는 큰 주민환경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수거량도 주 2톤에서 20여톤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양이 많아지자 팔당 유기농민들은 이를 퇴비로 만드는데 있어 蘆原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蘆原區는 소각장도 있는데 뭐하러 돈을 들여가며 팔당까지 음식쓰레기를 가져가느냐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 때문에 도시, 농촌간 폐기물의 자원화와 유기농산물 직거래라는 훌륭한 사례적 사업이 중단위기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趙淳 市長님, 본의원은 소각장 건설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량과 재활용 정책을 무게를 두어 추진해 가면서 이를 보완키 위한 최소한의 소각장을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건설해 가자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지적한 과다한 소각장 건설계획을 전면 수정, 축소할 생각은 없는지

다시 한 번 市長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서울은 2001년까지 소각장 건설에 한해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자치구로 하여금 모두 소각장을 짓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만 하더라도 중심과 외곽지역, 주거지역과 상업, 사무지역 간에는 쓰레기 성상 및 특성에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모두 소각으로만 강제하지 말고 각 자치구별 연도별 감량목표를 설정해 주고 소각, 재활용, 퇴비, 사료화공장 건설과 관계없이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쓰레기 처리방식을 개발토록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2, 3년 시행하고 나면 모범사례들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고 서울市는 이러한 사례들을 자치구와 협의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소각장 건설에 1톤당 1 내지 2억원, 소각건설이 최소 5년, 건설 후 사용년한이 길어야 20년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방안이 훨씬 경제적으로 보입니다.

연도별 감량목표 설정과 재정지원을 연결한 자치쓰레기 정책의 개발방안에 대한 市長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퇴비화처리용기 구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가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막겠다고 발표하자 서울市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속발효기, 소멸기를 구입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서울市 12억원, 자치구 4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중 기계구매를 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나치게 가격이 비싸다는 점입니다. 이 기계들은 회

사와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1일 100kg 용량에 1,500만원의 설치비가 듭니다. 즉 1일 1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1억 5,000만원의 설치비가 든다는 것이며, 올해 52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약 35톤의 기계밖에 설치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지나친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둘째, 완전하게 검증된 기계가 아직 없다는 점입니다. 몇 년 전부터 서울시내 관공서, 식당, 아파트단지 수십 곳에서 퇴비화 처리용기를 설치·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채 몇 개월을 사용하지 못하고 악취, 고장 등으로 사용을 중단해 왔습니다.

최근 생산기술연구원에서 K마크 인증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본의원이 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인증시험 자체가 장기간의 검사를 통한 것이 아니라 한두 차례의 시험을 거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껏의 문제인 가동 몇 개월 후의 문제에 대한 검증까지 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반기중 52억원의 예산을 들여 수백대의 기계를 구입했다가 채 1년도 못 가 문제가 생긴다면 예산낭비의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하면서 서울市는 생산기술연구원의 K마크 인증시험 성적서조차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업은 집행하는 자신조차 확신도 없으면서 진지하게 기계성능에 대해 검사도 해 보지 않고 K마크 인증시험 성적서에 대한 검토도 없이 생산기술연구원의 연구결과와 각 자치구의 기계선택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음식물의 자원화라는 사회적 요구의 책임을 면해 보려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사업은 충분한 검증과 그리고 가격의 현실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市長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안으로 음식물의 자원화에 성공하고 있는 한삶회, 팔당 상수원의 퇴비장을 비롯한 서울 인근지역의 유기농가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음식쓰레기의 수요처를 개발하고, 광주 광산구의 사료화 공장, 지렁이 공장 등의 성공사례들을 서울 또는 인근지역에 건설함으로써 음식물의 자원화 폭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市長님의 견해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2년 가까이 생활환경 위원으로서 폐기물관리행정에 참여하면서 느낀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폐기물관리 행정당국이 해야 할 일은 높아진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잘 조직화, 실천화시켜야 하고 자원재활용을 위한 쓰레기의 수요처를 연구·개발·육성하여 사회적으로 쓰레기 처리 순환 메커니즘을 만드는 일에 주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각장, 퇴비화 기기 등 가시적인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폐기물관리행정을 청소행정 정도로 인식하는 공직자들의 인식의 한계도 문제려니와 아직도 만연하고 있는 관료주의, 전시행정, 탁상행정이 극복되지 않고서는 거대도시 서울市의 폐기물 관리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본의원의 결론입니다. 이에 대한 市長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최근 본의원은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2000년 서울의 환경이라는 토론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날 발제자는 여러 가지 근거를 대며 서울인구가 1,200만명으로 늘어나는 2000년에는 지금에 비해 대기오염 물질이 더욱 늘어나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지난 1953년 1만 2,0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런던스모그와 같은 끔찍한 환경오염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을 듣고 본의원은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할 필요 없이 서울의 환경오염,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디에 손을 댈 것인가에 대해 市長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을 확고히 설정해야 합니다.

공원녹지의 확충, 환경예산의 대폭확대 등 趙淳 市長님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알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서울市 도시하천의 30%가 복개되어 있음에도 도림천을 또 복개한다거나 최근 고밀도 아파트의 대량건축 허가 등은 환경을 고려치 않은 소위 개발위주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환경은 이제 이렇게 여류롭지 않습니다. 서울市 전체의 정책우선순위에서 환경이 최우선되는 정책기조를 확고하게 확립해야 합니다.

둘째, 환경정책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한번 파괴되면 복원하기 어려운 부분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생태계, 대기질, 토질·수질, 쓰레기 순입니다. 쓰레기 문제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대기질, 수질, 토질을 훼손하는 방향을 주 해결방향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환경행정조직의 강화, 전문화가 절실합니다.

최근 2, 3년 사이에 환경문제가 사회적으로 급격히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서울의 환경관련 공무원은 그 수나 질에 있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市 25개 자치구의 환경공무원 인력을 보면 96년말 현재 전체 409명으로 95년 대비 37명이 늘어나 1개구당 1.5명 정도밖에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고급인력인 5,6,7급에서는 6명이 줄고, 8급에서 50명을 늘리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연구직이나 전문직은 한두 개의 자치구를 제외하면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너무 잦은 보직변경으로 전문적 역량을 쌓을 기회도 없는 실정입니다. 환경전문직의 보강 등 환경행정조직의 강화, 전문화를 시급히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넷째, 환경정보센터의 개설이 필요합니다.

환경정보의 공개가 가지는 의의는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주변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케 함으로써 자발적 시민운동을 촉발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서울市는 환경정보의 공개를 꺼려왔고 서울市에 유리한 정보만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제공하는 선택적 정보공개 형태를 취해 시민들의 불신을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감추고만 있을 시대는 지났습니다. 行政情報公開條例의 제정으로 환경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市廳, 區廳, 洞事務所를 연결하는 환경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일반주민들이 환경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정보센터를 개설해야 합니다.

다섯째, 서울市 특성을 고려한 지역환경 기준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서울市는 96년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서울市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으나 서울市는 아직 環境政策基本法에 규정되어 있는 대기, 소음, 수질에 대한 환경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기준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세계 최대의 도시 중의 하나인 서울市의 특수

성을 고려할 때보다 엄격한 지역환경기준의 설정이 절실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지역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치를 설정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本議員의 생각입니다.

여섯째, 환경행정 당국의 관료주의 타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綠色서울市民委員會, 서울의제 21 포럼 등 시민이 환경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부분적으로 마련되어 가고 있으나 정책결정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참여에 대해 公務員들의 부정적 시각이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과거 상명하달식 권위주의 행정수행 태도나 예산결정 집행과정에서의 구태의연함이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 해결은 그로 인한 피해를 직접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문제해결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또한 환경문제의 복잡성과 다양성에 비추어 볼 때 각계각층 시민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야 가능합니다.

서울환경 2000년을 걱정하며 드린 本議員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市長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趙淳 市長님, 首都圈埋立地, 서울의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회구성원으로 보면 아직 소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官에서는 이들을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70년대 환경운동가들의 역할과 이들에 대한 政府의 탄압을 돌이켜 보면서도 알 수 있듯이, 특히 환경문제에 관해서는 소수의 사람들의 문제제기를 무시하는 사회는 절대로 환경적

으로 건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그러한 문제를 사회구성원의 다수가 제기할 때는 이미 문제해결의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趙淳 市長님께서 후대 環境市長으로 불리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水資源管理委員會 所屬 鄭炳權 議員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炳權 議員; 새정치국민회의 道峰區 出身 水資源管理委員會 所屬 鄭炳權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또한 자리를 같이 하신 趙淳 市長과 劉仁鍾 敎育監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市長은 정당에 참여치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는 논리는 마치 차별화를 통한 정치적 도약의 기회를 노리는 것 아닙니까? 태생적 한계로 인한 金泳三 政權의 실패는 예견돼 왔습니다. 독단과 독선, 문민독재라는 또 다른 유행어 아닌 현실에 우리 시민의 생활은 날로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우리 地方自治도 위기를 맞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趙淳 市長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야권 일부에서 제기되는 대선 제3의 후보와 관련하여 趙市長을 거명하기도 하는데 어떻든 이 문제와 관련한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本議員은 趙市長의 의지와는 달리 시정 전반에 걸쳐 모순되게 운영되는 많은 부분이 있지만 평소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연구 검토한 시정운영 실태에 대하여 제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코자하니 면밀히 검토하여 市長의 입장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本議員이 그 이행여부나 개선과정을 의지와 인내심을 갖고 하나 하나 챙길 것이며 지켜보겠습니다.

市長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市 傘下 地方公企業에 대한 문제입니다.

地方公企業法 제2조에 지방공기업 적용 당연사업으로 수도, 궤도, 가스, 의료, 지방도로사업 등 15개 사업을 열기하고, 또한 임의 적용 사업으로는 체육장사업, 문화예술사업, 공원사업 등 6개의 단위사업을 열기하고 있어 총 21개 단위사업을 지방공기업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市는 이 21개 단위사업 중 事業所 등의 형태인 지방직영기업으로 同法 제13조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上水道事業本部와 하수도사업 2개만을 운영하고, 都市鐵道公社의 궤도사업, 의료사업은 5개 시립병원 중 地方公社 강남병원이 1개 사업, 都市開發公社의 토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의 시장사업, 施設管理公團의 주차장사업, 매·화장사업, 공원사업 중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 지방도로 중 자동차전용도로 등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타의 사업은 事業所의 형태로 운영하나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운영함으로써 地方公企業法을 위반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적용 대상사업의 경우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市에서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인 판매대금이나 사용료 등에 의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있음

에도 적자라는 등의 이유로 시민의 세금에 의한 일반회계로 운영하고 있음은 수익자부담원칙에 크게 위배됨은 물론, 불합리한 사업운영의 결과로 야기된 적자요인을 시설을 이용치 않는 다수 선량한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本議員은 지방공기업을 설치하여 특별회계로 지방직영기업방식으로 운영하든가, 아니면 事業所 형태의 간접경영방식인 地方公社, 公團化를 통하여 경영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되는데 市長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자금, 인력, 기술 등의 부문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공공부문의 영역에 민간의 능력 도입과 동시에 공적지원의 강화를 통하여 민간부문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사회 공공의 이익증대를 위한 民·官 協力方式인 제3섹터방식으로 地方公企業法上 公社나 商法上의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 생각하는데 市長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참고로 97년 서울市 예산에 의하면 世宗文化會館은 세입예산 32억원, 세출예산 94억원으로 결손액이 62억원이며, 體育施設事業所는 뚝섬체육공원의 골프장 운영을 제외하면 세입 156억원, 세출 214억원으로 결손액이 58억원입니다. 서울大公園管理事業所는 세입이 79억원, 세출이 219억원으로 결손액이 무려 140억원이나 됩니다. 이 3개 事業所만 볼 때 97회계연도 연간 348억원의 결손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있어 地方都市인 광주광역시의 경우 전국체전시설인 종합체육관 등 7개 체육시설을 事業所 형태로 公務員이 직영할 시 재정자립도가 75%에 불과한 것을 지난 95

년 5월 19일 광주광역시 體育施設管理公團을 설립하여 운영한 결과, 96년도의 재정자립도가 수입 31억원, 지출 31억원으로 100% 완전자립한 地方自治團體의 수범사례 또한 참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各 自治區의 지방공기업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各 自治區에서는 지방공기업 설치를 통한 공기업 적용 대상사업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地方公社, 公團 설립붐이 일고 있습니다. 江西區廳의 경우 交通施設管理公團, 松坡區廳의 松坡開發公社, 城北區廳의 地方公社 세텍스 등이 기 설립되었고, 永登浦·江南·瑞草·江北·江東區廳 등도 공영주차장관리사업, 견인사업, 마을버스사업 등 주로 교통관련 수익사업을 모태로 地方公社 또는 公團設立이 本議員이 조사한 바로는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自治區에서 설립한 地方公社, 公團이 설립목적에 맞게 수익사업을 통한 自治區 재정자립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當該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얼마만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또한 현재 自治區에서 설립하는 지방공사, 공단의 설립과 관련하여 市長께서는 어떠한 지도와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의 법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과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木洞·上溪地區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인 열병합발전소를 서울市에서 수년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하였으나, 그 운영은 건설 주체인 서울市나 산하기관이 아닌 정부출연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이 서울市와 매 3년 단위로 계약에 의거 한시적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음은 일견 서울市의 시설운영에 관

한 기술 축적과 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어 전문기관에 위탁 경영한다고 볼 때 이해되는 바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地方政府인 서울市의 시설물을 中央政府 출연기관이 관리하는데 따라 서울市의 고유권한인 감독기능의 상실, 대행사업으로 서울市의 막대한 예산 지원,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한 관리주체 선정으로 지방공기업 활성화 저해 등 제반 문제점이 상존하여 서울市 산하기관 중에서 항구적인 관리 주체의 선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외에도 木洞·上溪 열병합발전시설 동일지역 내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되어 시설에서 쓰레기 소각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는 열병합 발전시설이고 보면 자원회수시설과 열병합 발전시설의 관리주체가 서로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며, 이 자원회수시설 운영주체 또한 서울市에서 운영능력이 없다는 단순한 이유로 시설운영권을 木洞은 시공사인 선경건설에, 上溪는 시공사인 현대중공업에 위탁 운영시킴으로써 시설의 설치목적과 운영자와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에 위탁한 시설의 경우 민간자본의 특성상 실비 운영이 아닌 기업의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2002년까지 逸院地區 등 11개의 자원회수시설이 연차적으로 추가 건설될 예정으로 있음을 감안할 때 운영자 선정에 있어 나쁜 선례를 남기지 말고 서울市에서 이를 장기적 안목으로 집단에너지 공급과 자원회수시설을 통합운영할 별도의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거나, 기 설립된 지방공사, 공단에 이를 전담시켜 민간경영기법의 도입, 우수한 인력 확보를 통한 기술축적, 관리의 전문성 확보 등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시민부담 경감, 서비스의 수준향상 등을 도모함과 동시에 향후

시설운영 수요에 대비함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보는데 市長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市의 공기업 운영실태에 대하여 본의원이 몇 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따라서 합리적 개선방안으로는 향후 서울市 공기업 대상사업 전반에 걸쳐 정확한 현황 분석을 통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장·단기 과제로 분류, 단계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되어 그간 기회 있을 때마다 본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하여 누차 지적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엄청난 규모의 일을 전담하고 감독하여야 할 서울市 本廳의 기구가 없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영기업의 경우는 본부 독자적으로, 또는 사업소가 소속되어 있는 本廳 室·局의 개별적인 감독을 받고 있으며, 지방공사, 공단의 경우에는 각기 다른 本廳 主務局의 통제를 받고 있음은 하루속히 개선되어야할 것입니다.

감독기구의 입장에 따라 경영방침, 사업계획, 예산, 직제 및 정원 등의 승인 및 감독업무가 개별적으로 수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지방공기업 경영 전반을 총괄하며 조정하는 거시적 입장에서의 경영방침이 있어야 합니다. 직영공기업 상호간, 市 투자기관 상호간의 경영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있어 이들의 정당한 이익을 대변하고 동일한 잣대로 조정·통제할 수 있도록 시급히 서울市 기구를 개편하여 공기업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전문화시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市長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市 지하철 건설에 따른 재정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서울市는 지난 74년 지하철 1호선 개통에 이어 2,3,4호선을 차례로 개통하였고, 90년부터 시작된 5,6,7,8호선 제2기 지하철사업은 작년말 5호선 전 구간 개통에 이어 99년말 사업완료를 목표로 계속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市는 교통문제 해결의 유일한 대안으로 지하철 건설에 최고의 정책적 역점에 두고 제3기 지하철 즉, 9·10·11·12호선 건설을 98년부터 착공하여 2005년에 완공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재정 확보입니다. 96년 말 기준 서울市 총부채는 4조 9,173억원이며, 이 중 지하철 부채는 4조 5,334억원으로 총부채의 92%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철 건설관련 부채의 구체적 내용은 제1기 지하철 건설부채가 당초 1조 7,602억원이었으나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96년말에는 2조 9,638억원에 이르게 되어 운영주체인 地下鐵公社는 경영악화로 해마다 수천억원을 市費에서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2기 지하철 관련 재원조달방법도 97년 현재 총사업비 9조 4,290억원 중 정부지원 2조 123억원, 서울市 자체재원 5조 1,036억원이고, 나머지 2조 3,131억원은 도시철도공채 매각, 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 기타 해외기채 등에서 차입하는 부채성 자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2기 지하철 완전 개통 후 운영주체인 都市鐵道公社는 엄청난 건설부채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예견된 일입니다. 이에 또 다시 총투자규모 9조 1,000억원 규모의 제3기 지하철 건설을 계획하고, 재원조달방법은 中央政府支援金으로 총사업비의 50%까지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2기 건설 당시에도 서울市는 강력하게 정부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결국 21%를 지원받고 그 중 3,540억원은 되갚아야 하는 융자금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하철 건설에 따른 과중한 건설부채는 완공 후 지하철 운영 주체가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도록 재정압박을 가할 것이고, 더구나 서울市 전체 재정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95년말 현재 납입자본금 2조 800억원을 이미 잠식하여 자본적자액이 9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운수수입 등 경상매출액이 4,185억원인데 비해 매출원가가 무려 4,921억원으로 매출 총손실액이 736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일반관리비 324억원을 합치면 영업손실액이 무려 1,060억원에 이르고 있고, 지하철 건설 등에 소요되는 공채를 포함한 차입금 2조 6,000억원에 대한 이자지급액 1,717억원을 포함하면 매년 2,000억원의 적자를 발생하고 있어 자본금 잠식은 물론 자본적자액이 900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地下鐵公社를 매각하려면 단 한 푼의 돈을 받기는커녕 우리 市에서 900억원의 돈을 얹어 주어야 매각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상태에서 노사분규와 추가자본조달 불능상태에 빠져 도산할 수도 있는 상태인데 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자동차 구입시 지하철공채를 매입하는데 과연 강제 첨가소화방식이 아니면 그 누가 도산위기에 있는 지하철공채를 매입하겠습니까?

지하철 건설은 오늘날 서울市가 안고 있는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中央政府와의 재정부담문제는 이제 옛날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議會

의 입장입니다. 만약 政府와의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건설 자체를 미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과 같이 任命職 市長일 때는 中央政府와의 힘겨룸에 있어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떳떳하게 서울市를 위하여 政府와 맞설 수 있다고 보며, 또 그렇게 하는 것만이 民選市長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되는데 市長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3기 지하철 건설에 있어서 政府로부터의 50% 지원금을 받을 구체적 방법은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市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하고 있는 북부도시고속도로건설공사 제2공구와 정능천변 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제1공구 상판분절인 세그멘트가 잘못 제작되어 이를 그대로 시공할 경우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市長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들 두 구간의 도로건설은 천변에 교각을 세우고, 상판에는 거의가 PC세그멘트 공법으로 설계되어 북부도시고속도로 2공구에 사용될 세그멘트 896개가 제작 완료되었고, 정릉천변 도시고속도로 1공구에 사용될 세그멘트 1,296개가 제작 완료되어 각 현장으로 이동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세그멘트 문제점으로는 첫째, 주부재 철근 겹이음에 대한 용접으로 철근이 과다 손상하였고, 둘째는 용접자격증도 없는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용접하였으며, 셋째는 감리원은 사전 설계검토를 이행치 아니하였고, 넷째는 외국의 사례를 구체적 검토없이 설계 반영하였으며, 다섯째는 이들 공사에 대한 특별시방서를 무시하였고, 여섯째는 철근 정적인장강도 시험결과 용접부분에서 절단되는 등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사례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근 겹이음부분에 용접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나 어쩔 수 없이 용접을 하더라도 세심한 주의와 기술을 필요로 하고, 철근 겹이음 부분만 간단히 용접을 함으로써 철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나 철근 부위에 지나치게 열을 가해 주부재인 철근이 푹푹 패인 상태였고, 이들 두 공구에 필요한 세그멘트용 철근의 용접은 각 현장마다 두사람씩 용접 자격증도 없는 무자격자가 용접을 하고 있었으며, 용접의 부위가 조잡하기 그지없으며, 이들이 제작 초기부터 현재까지 용접을 해 옴에 따라 제작된 전체 세그멘트가 문제가 있을 것이고, 무자격 용접사에 대해 어느 누구 하나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철근의 점용접에 대한 것은 일찍이 외국의 사례에서는 있었으나 그들의 건설기술 및 건설환경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설계 능력 및 시공기술을 자랑하고 있는 그들로서는 점용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두 현장의 경우 도면에만 용접할 수 있도록 표기되었을 뿐 구체적 해설이나 설명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감리원은 이 부분에 대한 설계검토를 사전에 충분히 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고 이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사에 대한 설계는 국내 회사가 설계하였으나 V.S.L. 이라는 외국의 설계를 인용함으로써 현장에서는 설계에 따랐다고 하지만 주부재인 25㎜ 및 16㎜ 고강도 파이버철근을 겹이음함에 있어 전문기관이나 관련 학자들의 검토를 받아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작업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 관련기관이나 학자들도 철근 겹이음에 대한 점용

접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점용접은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들도 이 방법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으로 자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무엇보다 특별시방서가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써 공사 발주처인 서울市가 작성한 특별시방서 철근이음에 대한 방법으로 철근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직경 0.9㎜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견고하게 동여매여 한다라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구체적 내용이 없는 도면만을 우선하여 용접작업을 시행한 것은 큰 잘못이었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원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本議員의 지시에 의해 서울市 건설자재시험소 직원이 시료를 채취하여 건설자재시험소에서 철근의 정적인장강도를 시험한 결과, 모두 용접한 부위에서 끊어지고 인장강도는 정상이었는데 철근의 인장강도가 정상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關係公務員들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철근의 정적인장강도 시험이라 얼마든지 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용접으로 인해 패인 부분이나 용접으로 가열된 부분이 철근의 피로강도를 저하시켜 내구력 및 안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우리는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사고발생 3년이 지난 지금도 부실공사를 했던 동아건설과는 법적처리가 진행중에 있으며, 건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당산철교도 위험하다 하여 많은 논란 끝에 철거하는 등 너무도 값비싼 대가를 치

르고 있습니다. 성수대교를 붕괴토록 부실공사한 동아건설은 서울市가 발주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市長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市長, 本議員이 지적한 북부도시고속도로 제2공구와 정릉천변 도시고속도로 1공구 건설과 관련,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강구하고 조사단을 구성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市長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本議員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文化敎育委員會 所屬 李英順 議員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英順 議員; 존경하는 文一權 議長,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趙淳 市長과 劉仁鍾 敎育監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참여한 市民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로구 출신 文化敎育委員會 所屬 李英順 議員입니다.

1997년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 2년째 되는 해입니다. 本議員은 지난 6.27선거 현장에서 이 사회 주인으로 대접받기를 갈망하는 市民들에게 本議員은 포청천 趙淳 市長, 그리고 개혁을 하고자 市議會에 출마한 뜻있는 사람들과 손잡고 생활정치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를 방지하여 교육환경 개선, 녹지환경 조성, 복지제도확대 등을 확립하여 살맛 나는 서울市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本議員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市의 복지정책과 趙淳 市長께서 서울市 행정개혁을 위해 공약하신 경영마인드와 포청천 즉, 부정부패 방지를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지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정책에 대하여입니다.

우리 나라의 복지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은 익히 알려진 바 있지만 서울市의 복지수준 역시 미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趙淳 市長 출범 이후 서울市議會와 함께 노인복지기금 100억원 조성과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확대, 노인정 운영비 100% 인상 등 노인복지예산이 대폭 늘어난 점은 매우 긍정적인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또 여성발전기금 65억원 조성과 여성발전센터, 여성프라자 설립계획 등도 市民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특히 趙淳 市長께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으로부터 96년 여성발전에 기여한 분으로 인정되어 디딤돌상을 받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복지수준은 매우 개척할 분야가 많습니다.

특히, 서울市民의 보건 건강복지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고민도 계획도 없는 실정입니다.

충치예방의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하여 말씀하고자 합니다.

천백만 市民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강복지정책에 대하여 趙淳 市長께 질문을 드리니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아를 상하게 하는 중요한 구강병으로는 첫째가 충치이고 둘째가 잇몸병입니다. 한국인 12세 아동의 우식경험 영구치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국민구강건강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2000년에는 약 3.6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표 1에서 보듯이 국민 연간 치과진료비는 92년도 현재 4,800억원으로 서울市民은 약 1,200억원이 소요되었으며, 2000년이 되면 서울市民이 치과 진료비로 약 1,997억원을 소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구강병의 예방은 치료와는 달리 민간집단이 할 수 없고, 특히 구강병은 대부분 발생예측이 가능하고 예방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예방을 개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구강보건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政府와 地方自治團體가 주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자료에 의하면 거의 모든 先進國에 있어서는 수돗물 불소화사업과 같은 예방사업을 통해 충치발생률을 급격히 낮추어 가고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의 실시 사례를 들어 보면 미국이 1945년 처음 실시하여 현재 50개 大都市 중 42개 도시에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캐나다, 동유럽, 호주, 뉴질랜드와 소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필리핀 등 開發途上國인 東南亞 國家를 포함한 전 세계 60여개국이 이미 오래 전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만 유일하게 불소화사업에 대해 소극적인 실정입니다. 홍콩은 1961년부터 실시하여 1980년 그 효과를 측정한 결과 6세에서 8세 아동에서 충치가78.5%나 감소되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198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淸州市의 연도별 예방효과를 보면 국민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경우 약 50% 정도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돗물 불소화사업의 예방효과는 50%에서 65%로 높습니다.

더욱이 불소화사업은 수돗물 불소화를 통한 음식물 섭취를

통해 치아, 잇몸뿐 아니라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효과까지 있으며 소아마비 다음으로 큰 예방보건사업입니다. 이렇듯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다방면에 효과가 있는 값싸고 질좋은 保健福祉事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불소가 포함된 수돗물이 인체에 미치는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의 권위 있는 學者들과 硏究所들은 그 동안 수십 년간 불소 수돗물이 인체에 유해한가에 대해 다각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사망, 발병, 암, 태아의 성장발육, 신경조직, 정신장애, 심장과 순환기, 피를 만드는 기관 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수도 불소화의 안전성은 세계보건기구뿐만 아니라 美國의 醫師協會, 英國의 醫師協會 등 유럽의 60여개에 달하는 醫師團體, 保健醫療團體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保健福祉部는 이미 1980년 11월 11일 保健社會部 당시 保社部訓令 제142호 상수도불소주입에관한규정을 만들어 地方自治團體에 시달하고 1995년 國民健康增進法을 제정하면서 상수도 불소화사업을 포함시켜 실시 의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도 적극 권장사업으로 설정하여 각 地方自治團體에 권고하고 있으며 16개 地方自治團體가 이 사업을 지자체 시행령에 의해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서울市의 경우 설치비 약 5억원, 매년 유지비 2,000만원, 1인당 1년간 200원이라는 약품비용으로 손쉽게 시행할 수 있는 시대적 조류임에도 불구하고 서울市는 시민구강보건사업을 上水道事業本部에 국한시키는 기능적 사고로 대처해 오고 있고,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公務員들은 불소화사업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조차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편견과 무관심으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것보다 병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치료보다 우선임을 감안할 때 市 當局에서도 예방을 위한 정책을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福祉政策에 남다른 관심이 많으신 趙淳 市長께서는 이 중대한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우려와 설치방법, 약품, 공급회사 등 이와 연관한 상세한 정보들이 수록된 일월서각 출판 시민구강보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와 도서출판 건치에서 발행한 상수도불소화와 지방자치 책에 수록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기능 강화와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中央政府나 地方自治團體는 지금까지 국민과 시민을 위한 보건의료복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지 못해 왔고 더욱이 地方自治團體는 中央政府가 시달한 보건의료사업만을 수동적으로 시행해 왔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공공의료 서비스보다는 이윤추구에 집착하는 민간인들에게 책임을 전가시켜 왔습니다.

이제 地方自治時代에는 地方自治團體 스스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 복지에 대한 정책방향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건강증진, 질병예방, 재활서비스를 보완하고 노인, 신체 및 정신장애인 등을 위한 요양시설, 주간보호소 등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날로 증가하고 있는 태아성감별로 인하여 여아유산에 따른 남녀차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남녀

차이 성비 방지는 시급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女性團體들은 부모 성 함께 쓰기를 전개하면서 남녀 존중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本議員은 다음과 같은 보건사업을 확대 활성화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동, 청소년, 여성을 위한 보건사업으로, 기형아·선천성 장애인의 발생 예방, 임신, 분만, 육아관련 상담과 산전 산후 검진, 남녀존중에 대한 홍보교육, 영·유아에 대한 정기적인 성장발달검사, 신혼부부를 위한 건강검진, 가족계획 교육과 보건교육, 市敎育廳과 협조하여 초·중고생 건강을 위한 생활교육과 구강보건, 사고예방과 성, 흡연, 음주, 약물중독에 대한 교육과 상담, 정신질환 조기 발견과 스트레스 관리법등에 대한 정신건강 관련 교육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중장년과 노인을 위한 보건사업에 있어서는 만성퇴행성 질환과 자궁, 유방, 위, 간, 대장암 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기 건강검진 사업, 만성질환자 등록 및 교육, 지속관리, 정신·신체장애인, 노인을 위한 낮병원 운영, 재활요법실 운영, 노인정, 노인대학 등을 통한 정기 방문과 건강상담, 건강교육, 건강체조 교육의 실시 확대 등 地方自治時代가 保健福祉時代로 가기 위해 위와 같은 보건사업들을 새롭게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市는 기존 보라매공원, 강남병원, 정신병원 등 부대 시설과 보건환경연구원, 25개 區廳에 속한 保健所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네트워크을 통해 활용한다면 기존의 예산과 인적 자원을 통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趙淳 市長께서는 이러한 보건정책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設計變更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2기 지하철 5호선 공사 과정에서 지질조사와 기초조사 등에서 사전조사가 부실함으로 인해 460차례의 設計變更으로 약 3,355억원의 추가공사비가 발생되었다는 것이 누차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6호선 역시 95년부터 96년 10월까지 1년 10개월 동안 12개 공구에서 20차례의 設計變更으로 337억 7,500만원의 추가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95년 7호선도 역시 27개 공구 중 85차례의 設計變更으로 664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96년 10월 현재 11개 공구에서 11차례의 設計變更으로 54억 9,900만원, 즉 1년 10개월 동안 약 718억 9,900만원의 추가 예산지출이 있었습니다. 8호선 역시 13개 공구에서 62차례의 設計變更으로 388억 7,000만원이 추가 예산 지출이 있었습니다.

設計變更 이유로 개설공법 변경, 토공운반거리 변경, 터널공법 변경, 폐기물 처리비 반영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습관적으로 위와 같은 設計變更으로 인한 추가예산 지출의 이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예산편성시 사전에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비 반영, 적치토사 부지확보, 운반거리 변경 등 삼척동자도 웃어버릴 이유들을 내세우며 이렇듯 地下鐵建設本部는 시민의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는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특히 建設安全管理本部가 발주한 공사의 경우 아예 자동적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로 건설, 교량보수공사 46건 중에 95년 한 해에 44회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약 795억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갔습니다. 96년에 들어서

도 9월말까지 같은 공사에 대해 또 다시 29회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4,015억 6,500만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결국 73회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총 1,210억원의 추가예산이 집행된 것입니다.

위의 표에 보듯이 공사가 시작되면 매 공사마다 1년에 한 차례 내지 세 차례까지 설계변경을 해 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발주처는 천편일률적으로 地下鐵建設本部 사업의 설계변경원인을 그대로 둘러대고 있습니다.

건물신축, 보수공사, 건물부대공사에도 설계변경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本議員은 몇 가지 예를 들어 서울시 행정집행력이 어느 수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구로구 내 공구상가 앞에 경인국도에 폭 15.4m, 길이 340m의 짧은 지하차도건설사업을 무려 5년씩이나 지연시키고 있는 사례입니다.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전 조사없이 공사를 시작하여 한전의 고압광케이블 매설물에 의해서 도로사업은 5년씩이나 지체되면서 3회의 설계변경으로 10억 9,300만원의 예산낭비를 가져왔습니다. 더욱이 공사지연으로 인해 주변에 엄청난 교통난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행정의 원시적 수준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시립박물관의 경우 그 건립부지인 경희궁터에 유물매설과 지하 수맥이 많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사전 계획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세 번씩이나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서울市의 행정집행력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북부도시고속도로 2공구의 경우는 공사를 91년 12월 31일

시작하여 98년 6월 30일 완공되는 공사입니다. 이것은 93년부터 96년 9월 말까지 여섯 차례의 설계변경으로 총 공사비의 28%에 해당하는 336억 6,000만원이 추가지출이 되었습니다. 같은 4공구의 경우도 공사기간이 비슷한데 93년부터 96년 9월까지 여섯 차례의 설계변경으로 총 공사비의 17%인 약 218억 2,000만원이 추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서강대교 건설공사는 92년 12월 29일 공사가 시작되어 올해 4월 30일 완공예정입니다. 이곳은 96년 9월까지 7차례의 설계변경으로 총 공사비의 30.6%인 168억원이나 추가지출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완공 당일 이틀 전, 7일 전, 한 달 전에도 설계변경으로 물량증가, 물가변동의 이유로서 추가예산이 비합리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趙淳 市長님께 묻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천백만시민이 趙淳 市長이 장점으로 내세운 경영마인드와 포청천의 깨끗한 공직사회가 일상 시정에 어떻게 관철되고 있는지 그 결과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같은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다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복지정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趙淳 市長께서는 행정개혁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썩어빠진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이 재연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 보았습니다.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그 말조차도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사전 지질조사와 기초조사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합리적이고 깨끗한 서울시 행정을 위

한 구체적 대안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화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市 전역에 걸친 균형 있는 공원녹지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공원녹지화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각종의 공원녹지의 현황을 보면 여의도광장, 영등포 구시립병원, OB맥주공장, 한강고수부지 등의 사업이 일개 자치구의 예산의 약 5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특정지역에 대한 편파적인 예산집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민이 어떻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원조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원조성이 영등포보다 더 시급한 자치구가 많습니다. 금천이나 구로, 강서, 성동구 등 공장과 낙후된 환경에 둘러싸여 있고, 인구밀도가 높은 곳들입니다.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데다 열악한 재정상태로 인해 자력으로 공원조성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같은 서울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지역환경의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지역단위의 균형 있고 형평 있는 공원조성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市長께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劉仁鍾 敎育監에게 질문하겠습니다.

敎育廳 역시 학교 신축, 증측에 따른 잦은 부실공사와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고,

둘째로 청소년들의 입시스트레스, 전학, 진학, 향후 진로, 약물 중독, 이성관계, 성 문제 등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육관계자에게만 맡겨서는 청소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本議員은 市敎育廳이 과감하게 민간단체들에게 예산을 지원하여 효과적인 청소년 선도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敎育監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7년부터 실시하는 성교육에 대해 양호교사에게 주로 전담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여성사회교육원 등 여성단체가 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유아, 초·중·고등학생들의 연령에 맞는 교육내용을 연구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위탁교육과 강사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넷째, 경기여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생소요와 교사들의 항의가 95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비민주적인 문제와 비리에 대하여 올바른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경기여상의 소요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本議員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都市整備委員會 소속 李容富 議員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容富 議員; 존경하는 議長,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趙淳 市長님과 劉仁鍾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송파구 출신 都市整備委員會 所屬 李容富 議員입니다.

제4대 議會 開院 이래 세 번째 이 단상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本議員이 그 동안 의정활동과 시정질문을 통해 한 차원 높은 바른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많은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三豊百貨店 崩壞事件 이후 多衆利用施設物의 안전점검에 대한 제도정착과 서울大公園의 관리개선, 市立病院 靈安室 운영에 대한 특혜의혹 해소, 私立學校 移跡地 處理指針 廢止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개선해 주신 데 대해서 평소 존경하는 趙淳 市長님께 우선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개혁과 市政의 발전은 제도를 통한 개혁을 완성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 市長께서는 民選自治時代 初代市長으로서 市民本位의 市政, 人間中心의 都市라는 市政目標를 세우고 市政運營 3個年計劃을 수립한바 있으며, 특히 안전, 교통, 환경, 복지 등 각 부문별 정책방향을 정하고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제 그 성과가 하나씩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本議員은 유감스럽게 市 政策方向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行政實名制, 資料答辯實名制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격적인 地方自治時代가 시작된 지 벌써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法令과 制度는 과거 開發年代의 것들이 그대로 유지된 채 제도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는 단적으로 서울市廳에 일하는 공무원은 많아도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다는분명한 사실입니다.

저희 議會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언제, 누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執行部에서는 언제, 누가 작성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는 公職者가 法規의 취지내용을 정확히 이해 못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의견을 자료로 제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市 行政의 근거가 되는 上位法도 위반하고 있는 것, 시대에 뒤져 쓸모가 없는 것,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법이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서울市의 條例나 規則, 例規도 마찬가지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議員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귀찮게만 생각말고 연구·검토의 기회로 삼고 준비가 됐으면 준비한 공무원의 이름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市政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本議員은 이 자리에서 대안으로 집행부의 답변자료나 행정의 실명제를 요구하면서 누가, 언제,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작성하고, 이 작성된 문서는 확인을 어떻게 받았는지 하는 것까지를 기재해서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行政實名制, 資料答辯實名制를 정착해서 지금부터라도 시정하고 개선해 나갑시다.

本議員이 참고로 그 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준비한 자료를 예로 들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本議員이 지난 97년 3월 5일 여러 가지 사항의 목록을 적어서 정식절차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의 자료는 李容富 議員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답변서라고 표시할 뿐, 이 자료가 과연 책임 있는 당사자의 확인을 거쳐서 제출되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쉽게 고칠 수 있고 작은 것에서부터 소중히 다룰수 있을 때 우리의 행정은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OB맥주 공장터를 서울市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1,000억원이라는 豫算을 방만하게 편성해서 서울市議會가 이러한 자료의 확인절차 없이 통과시켜 주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死後

藥方文格으로 執行部의 이러한 잘못을 市議會가 뒤에서 追認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는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책임을 지고 반성해야 될 대목으로 생각하면서 本議員도 여기의 한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제 우리는 密室行政이 아닌 公開行政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行政實名制, 資料答辯實名制가 즉각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市長님의 견해를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財閥企業 특혜의혹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상토지현황을 本議員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市 江南區 狎鷗亭洞 428번지 압구정아파트지구내 현대백화점 인접토지입니다. 면적은 약 1만 4,000㎡, 서울市 소유의 替費地입니다. 이 면적도 앞서 本議員이 요구한 바와 같이 서울市의 답변자료에 의하면 두 가지로 제출되고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추후 關係實務者에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항은 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학교용지, 4종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용도는 施設管理公團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未開設學校用地 지하에 民資를 유치하여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江南區廳長이 연출하고, 서울市 交通管理室에서 主演으로 등장하고, 서울市 敎育廳에서 助演으로 출연해서 서울市의 부실감독의 작품을 本議員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地下駐車場을 건립해서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江南區廳長은 95년 4월 16일 본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학교에서 공원주차장으로 변경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서울市에서는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관계부서 協議를 한 바 있으며, 서울市敎育廳에 本議員이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市 敎育廳은 2005년까지 학교설립계획이 없음을 市長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市는 96년 1월 19일 本 件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건에 대한 政策會議에서 향후 학교용지 이외에도 여타의 공공수요 발생시 활용할 수 있도록 留保土地로 보존함이 타당하고, 토지이용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키 위하여 96년 2월 27일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변경 불가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96년 1월 19일 정책회의 결과에 따른 대책으로 서울市 環境管理室에서는 미확보용지의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에 포함,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영구 구조물이 없는 도심지 농촌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96년 8월 29일 趙淳 市長께서 천백만 시민에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環境管理室은 96년 9월 12일 市長 방침으로 학교 개설시까지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른 서울特別市 1997년 일반회계 歲入·歲出豫算案 636쪽의 자료를 참고해 보면, 이 당시의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압구정동 지하철역 주변 시유지 공원조성 해서 15억 800만원 소요 예산을 편성한 바 있는데 예결위의 97년 확정 예산안을 보면 이 예산안은 어디론지 종적을 감춰 버리고 없습니다.

왜 이런 사실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本議員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유인즉 강남구청의 건의를 받아 바로 이곳에 서울市 交通

管理室에서는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민자를 유치하여 지상 1층,지하 4층 규모의 주차장 건립을 추진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本議員이 알기로는 趙淳 市長님께서는 그 동안 이 정책방향은 과거 도로와 주차장을 넓히는 데 주력했던 교통정책을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수요자 관리정책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우리의 交通管理室은 이와 상반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현재 강남구청장의 강력한 건의를 받아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를 특정업체의 주차장으로 확대 건립해 준다는 비판여론의 제기가 예상되는데 이는 市長님의 시정방향과 市정책협의 결정사항을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市長님, 학교용지 지하에 민자로 주차장 시설을 유치하면 결과적으로 민자유치에 참여한 기업은 엄청난 특혜를 볼 것이고, 상대적으로 서울市는 이 다음 타 공공시설 전환이나 처분제한으로 엄청난 재산손실을 보며, 또한 백화점 주변에 대규모 주차장 설치로 압구정동 일대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市敎育廳에는 본 건 미개설학교용지는 2005년까지 학교개설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본의원 판단으로는 2005년이 채 되기도 전에 학교용지가 필요가 없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압구정동 일대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추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으로 인구가 늘어날 여지가 없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매력을 느끼고 있던 8학군의 매력도 이미 없어졌습니다. 현재 이 지역 취학아동은 날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교용지로 불필요하게 되면 타 공공용이나 아니면 매각을 해야 될텐데 지하에 이미 4층이나 되는 주차장이 시설되어 있는 이 땅은 토지이용계획 측면에서 이미 그 효율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고 영원히 대기업의 주차장으로 쓰도록 특혜를 주는 것은 너무나 명명백백한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대형 백화점 주변에 대형 주차장을 설치하면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문제 해결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本議員은 판단됩니다.

지난해 백화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물에 대하여 주차장 상한제를 설치하는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주차장 규모를 축소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苦肉之策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한국 최고의 부유층이 모여 산다는 압구정동, 이 압구정동 백화점 주변에 대형 주차장을 설치해 고급 승용차를 몰고 와 소비를 조장하고 교통난을 유발시키는 시설을 서울市가 앞장서서 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本議員은 생각하는데 市長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직접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륜장 수익금 중에 송파구에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송파구 소재 올림픽공원은 온 국민의 가슴 속에 88서울올림픽의 감격이 스며 있는 상징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옛 한성 백제의 문화유적인 몽촌토성이 있고 세계 유명 예술인의 조각작품이 곳곳에 서 있으며, 역사와 문화, 낭만이 깃든 명소로서 수많은 서울市民의 휴식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 이곳에 경륜장 설치계획시 뜻있는 시민, 사회

단체 등의 반대가 빗발쳤음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하여 지금까지도 주민들의 이전촉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수회에 걸쳐 송파구의회 이전촉구결의안이 채택 제출되는 등 뜨거운 감자로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더욱이 이곳 경륜장에서 거두어들인 총 매출액 10%의 경주마권세 중 송파구에는 그 중 3%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되고 나머지 97%는 서울市세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주마권세는 교통혼잡, 주차난 가중, 다수 관람객으로 인한 환경공해, 청소문제, 지역정서, 교육상의 문제 등 인근지역 주민들이 입게 되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사회통념상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도 1995년도 서울市는 69억 2,800만원의 세입을 올렸으나 고통받고 있는 저희 송파구에는 겨우 2억원만 교부되었고, 1996년의 경우에는 서울市가 183억 2,600만원의 세입에 송파구에는 5억 5,000만원만 교부되었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감나무에 열린 감 100개 중에 3개는 송파구가 갖고 97개는 서울市가 불로소득으로 가지고 간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고 이 지역에 있는 구민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물론 地方稅法 관련 규정에 의해서, 法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답변하시면 별 소용이 없겠지요. 그러나 이 문제는 경륜장 입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적 차원에서 송파구에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나 체육시설, 도서관 같은 문화시설들을 건립토록 특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조치가 없다면 松坡區民들은 경륜장 이전촉구 운동이 더욱더 확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일이 계속 추진되고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서울市의 경주 마권세 불로소득은 모두 잃게 될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市長님의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무임승차권 발급에 따른 문제점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현행 2기 지하철 역무시스템은 승차권 자동판매기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객이 판매기에서 직접 승차권을 구입토록 되어 있으나, 무임권 발급을 위해 항상 매표소에 직원이 대기하고 있어야 되므로 유임승객에 비해 무임승객에 대한 인적, 물적 서비스가 더 소요되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지하철 적자재정에 비추어 볼 때 무임승차자, 경로우대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에 대해 물론 법률에 의해서 무임승차권을 지불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중앙부서에서 버스표 지급과 같이 지하철 운임보전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렇게 시행했을 때 인력 낭비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의 개선용의가 있는지 市長님께 견해를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市 대기오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市의 대기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인식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議會나 執行部가 함께 노력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도 서울의 대기오염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市長님,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며, 서울市 차원에서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면서, 이에 대한 서울市의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市長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本議員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交通委員會 소속 金喜甲 議員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喜甲 議員; 저희 同僚議員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배려해 주시고 계신 文一權 議長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同僚議員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경청하시고 계시는 우리 趙淳 市長님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陽川區 출신 金喜甲 議員입니다.

길고 지루했던 겨울도 이제 한풀 꺾이고 희망이 샘솟는 봄입니다. 이제 임기 2/3를 지낸 현재의 시점에서 지난 뜨거웠던 6.27 지방선거 열기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이제 눈앞에는 1년밖에 임기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착잡한 심정입니다. 지난 2년간 과연 저는 최선을 다해서 임했는지에 대해서 자성을 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모두에게 처음 시작했을 때의 마음으로 남은 임기를 마무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을 외면하고 있는 이 지하철에 대해서 소 항목으로 일곱 가지를 묻겠습니다.

총론에 대해서는 우리 市長님께서 직접 답해 주시고, 자세한 부분은 本議員이 요구한 關係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 지하철 5호선의 개통으로 서울市가 이제는 본격적인 지하철시대에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중교

통 수송분담률도 버스를 무려 1%나 앞지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1일 이용시민인 약 460만명이 지하철을 운반하는 대상일 뿐,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고 있는 시민이 바로 주인되는 그런 교통수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本議員이 지난 3월 10일부터 5일간 인텔리서치와 공동으로 지하철 종사자 230여명을 대상으로 지하철 안전운행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결과, 잠정집계표에 의하면 지하철 안전도에 대해서, 응답자 승무직종사원 136명중 96명, 70%에 해당됩니다. 안전도 60점 미만으로 지하철 안전에 의문을 제기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고유형에 대해서도 14가지 사고유형 중 플랫폼이 과밀해서 승객이 추락할 위험이 있다 이것이 약 16%, 전기적 이상으로 인한 운행중단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약 14%, 철로 및 고가철로의 균열 그리고 붕괴가능성이 12.3%, 선로파손 및 선로장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11.5% 등을 제기하고 있어 지하철 안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지 않나 판단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우리 市長님께서는 지하철을 평소에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하철 안전도에 대해서 과연 몇 점 정도의 점수를 주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최근 서울市 公報室 주관으로 서울市에서도 公社職員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市長님, 지금 하루에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이 460만명정도로 예측하는데 이 460만에 육박하는 이 지하철의 안전개선, 그리고 시민편의 제고를 위해서 서울시민을 상

대로 광범위한 여론조사의 필요성이 本議員은 있다고 생각는데 여기에 대한 市長님의 견해도 아울러서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문제입니다.

툭하면 지하철이 고장납니다. 地下鐵公社에서 本議員에게 제출한 운전장애 건별 세부내역에 따르면 97년 1월 한 달에만 공식적으로 5건의 운전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기 지하철의 경우 97년 현재까지 20건에 달해서 鐵道廳 소속 차량사고까지 같이 합친다면 서울시민은 한 달에 평균 다섯 번 꼴 이상의 운전장애로 골탕을 먹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나 우리 地下鐵公社側은 市議會 업무보고시에 95년도에 19건이 나왔고, 96년도에 16건의 운전장애가 발생된 것으로 議會 업무보고 서류에 정식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本議員의 자료요구에는 95년도에 28건, 96년도에 27건으로 9건의 장애건수가 축소보고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우리 市長님께 95년도, 96년도 발생한 운전장애 건수를 도대체 몇 건으로 보고를 하셨습니까?

두번째, 市議會에 이렇게 9건의 사고를 축소 보고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번째, 연간 발생되는 지하철 운행사고는 도대체 정확히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97년도에 장애건수를 11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11건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목표를 세웠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本議員이 뒤에 별첨자료 2건으로 해서 지하철이 議會에 보고한 사항, 本議員에게 다시 세부내역으로

보고한 사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세번째입니다. 너무나 멀고 먼 환승역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側이 제출한 환승정거장의 동선거리 현황에 따르면 1기 지하철의 경우에는 평균 환승거리가 98m에 이르고, 2기 지하철은 환승거리가 138m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서 1·2기 지하철에서 시민이 환승하는 평균 동선거리는 93m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어떤 환승거리 자체가 최장 환승역 지하철 5호선의 경우를 살펴보니까 무려 312m, 이것 너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本議員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는 당초에 1·2기 지하철건설 자체가 충분한 계획의 수립 없이 추진된 결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존 정거장과의 환승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이동보도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시민편의시설이 보완되고 이러한 3기 지하철 건설에 있어서는 환승계획에 대한 철저한 사전계획이 수립되어 시민의 불편이 미리 예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1일 5,000톤 가량의 지하수를 퍼내는 한강 하저터널이 행여 지하수를 퍼냄으로 인해서 지반침하 붕괴 우려와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 한번 묻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지하철에서 하루 7만 8,000톤 가량의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종로3가역의 경우에는 지하수 수위가 30m 내외로 내려가고 삼성역 일대의 지하수 수위가 최고 30m까지 하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전철역에 대해서 지반침하에 따른 붕괴 우려도 제기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관계관이 답변해

주시고요.

최근 개통된 汝矣島 하저터널의 경우 本議員이 알고 있기로는 하루에 5,000톤 가량의 지하수를 퍼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하저터널의 경우에 안전도에 대단히 신경을 써야 될 터널로 알고 있는데 하저터널 건설 당시에 우리 책임자였었던 金學載 副市長께서 하저터널의 예상되는 연도별 지하수위의 변화추이와 지반침하에 따른 붕괴 우려는 없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1기 지하철 전동차와 역사의 구내 조도가 모두 기준에 미달되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1기 지하철의 전동차 및 역사의 구내 조도 현황에 의하면 1기 지하철전동차의 경우 1·2호선은 220lux, 3·4호선은 평균 200lux, 이것은 한국공업표준규격에 규정하고 있는 거실의 독서기준인 300 내지 600lux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고, 1기 지하철의 경우에는 전체 115개 역사 중 지하철공사 규정에 정한 기준에 미달된 역사가 22개 역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듯 전동차 내의 조도기준 미달은 독서 및 신문구독의 불편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여성승객에 대한 성추행의 위험도 있어 이용시민에게는 대단히 큰 원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本議員이 地下鐵公社에서 자료제출한 것을 보니까 승강장의 조도가 50lux밖에 안 된 역도 있습니다. 50lux라면 대단히 어둡고 이런 어떤 승강장의 조도 자체가 50lux밖에 안 된 이런 전철역에서는 자칫하면 퇴근길에 혼잡한 승강장에서 승객의 추락사고도 어떻게 보면 예견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째, 묻겠습니다.

공사측에서는 本議員에게 제출한 자료 중 전동차 차량 내

독서에 필요한 기준조도를 150 내지 300lux라고 제출했는데 이 수치는 독서에 필요한 수치가 아니라 단란이나 오락용도의 거실조도에 불과하고 독서는 적어도 최저 300lux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엉터리 자료가 本議員에게 제출된 사유를 사장님께서 해명해 주시고요.

둘째, 차량의 조도는 지하철 전동차 제작시에 사양서상에 시험기준이 못박혀 있는데 제작사양서상의 기준조도는 도대체 얼마고,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차량의 경우에 어떤 사유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公社 社長님께서 직접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준미달 승강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과 개선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의 여섯번째 문제입니다.

지하철 노조에 대한 강경대응, 이는 반드시 파업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本議員은 民選市長 체제 출범 이후에 지하철 노조와의 극한 충돌없이 순리적으로 대화로 해결하여 시민의 발을 묶는 극한상황이 발생되고 있지 않은 평화적인 노사관계가 정립되고 있다는 점을 참으로 다행스럽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趙淳 市長님의 가장 자랑스러운 치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작년말에 우리 노동법 사태로 말미암아서 야기된 파업의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노사관계 때문에 야기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公社나 서울市로서는 그러한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약간의 역부족이 아니었나 이해가 됩니다.

최근 여·야 합의로 이 노동법이 國會에서 타결되어 지금까지 해 온화합적인 노사의 기조를 잘 유지만 한다면 趙淳 市長께서는 임기 기간 동안에 지하철 노조와의 무쟁의로 이끈 최초의 市長으로 기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렇듯 이렇게

화합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는 노조 핵심간부 5명에 대한 공사측의 고소와 노동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법적대응이 자칫하면 노조를 자극해서 파업이라고 하는 극한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공사 사장님께서는 노조간부 5명에 대한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정이 公社 社長의 독자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내린 결정인지, 아니면 서울市나 中央部處의 지시, 협조요청에 근거해서 내린 결정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행여 이 파업기간 중에 우리 行政1副市長님의 직접적인 종용은 없었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요.

최근 議會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작년 노동법 사태시에 우리 行政1副市長의 강경대응 지시에 대해 行政1副市長님께서 직접 해명해 주시고, 또 行政1副市長님의 일반적인 노조관과 노조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지하철의 마지막 7가지 문제입니다.

3기 지하철의 조기 착공의 성공여부는 무엇보다도 9조 1,000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재원을 언제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조달하느냐가 주요한 관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技術副市長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3기 지하철의 조기 착공으로 행여 2기 지하철의 마무리 공사나 기타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들은 없는 것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십시오.

새로운 지하철건설이라고 하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건설된 하루 60만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의 운영인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다는 균형감각을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큰 제목 두번째입니다.

서울市의 상징마크에 대해서 本議員은 상징마크가 모방의혹이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서울市는 지난 95년 10월부터 약 1년 간에 걸쳐 서울 CI개발계획에 의거해서 약 4억 8,000만원, 디자인 비용만 하더라도 1억 8,000만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의 상징마크 및 슬로건을 공모해서 CI개발사업을 추진한바, 本議員은 김현디자인파크社에서 제출한 상징마크가 그들만의 독창적인 작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의혹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상징마크는 독특한 한글서체를, 소위 어깨동무체를 개발해서 94년 정도600년 작품전에 출품된 성공회대학 신영복교수의 「서」 「울」 작품과 기본구도면에서 너무 흡사하다는 점입니다.

북한산을 상징하는 「서」와 한강수를 상징하는 「울」이 한데 어우러진 서체구도와 「산」과 「한강」을 기본으로 하는 디자인구도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의혹이 있고요. 本議員이 알고 있기로는 이 작품이 民選市長 취임을 축하하는 의미로 市長께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작품은 趙淳 市長님께 전달된 시점이 95년 8월이었으니까 상징마크가 만들어진 96년 10월경보다 약 1년 정도 앞서서 우리 市長室에 게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예라고 하는 부분과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이겠지만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다음 장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확인한다면 그다지 차이점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림을 議員님들 참조하셔 가지고 비교를 한 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림의 서체와 우리 서울市의 공식 채택된 휘장마크를 비교

해 본다면 휘장마크를 제출한 김현디자인파크社의 독창적인 작품으로 좀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本議員은 만약 김현디자인파크社가 개발한 서울의 휘장 자체가 모방이었다면 서울市는 김현디자인파트社에 이미 지급한 1억 8,500만원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고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關係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정만 해 놓고 관리부재인 우리 지정보호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서울市는 지난 68년 이래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이나 거목, 희귀목에 대해서 보호수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바, 최근 3년간 서울市費 투자액을 살펴보면 연간 1,900만원밖에 지나지 않아 영양공급을 받는 나무가 1년에 불과 2, 3그루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山林法 제68조와 보호수관리요강 제6조에 의하면 지정보호수 관리책임은 분명히 광역자치단체에 있음에도 실제 나무관리를 區廳에 떠넘김으로써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채 수령이 최하 400년 최고 800년 이상의 희귀수 200그루의 나무가 고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關係官께 묻겠습니다.

첫째, 서울市 지정보호수 관리책임은 市廳에 있습니까, 管轄區廳에 있습니까? 책임이 市에 있다면 96년도 25개 區廳에서 지출한 1억 7,000만원 가량의 관리비의 소급지원 여부, 그리고 향후 예산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둘째, 그간 보호수 관리를 단지 식물학적인 관점에서만 관리해 온바, 향후 이 보호수의 역사적 연원이나 나무와 관련된 전설 등 학계의 고증

을 통해서 문화유적지나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도 關係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피부서로 전락된 교통, 청소분야의 직원들에 대한 근본적인 사기대책이 절실하다라는 점을 네번째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서울市에서는 96년 11월 13일 교통, 청소 등 역점 시책추진 사업부서 근무자에게 경력가점과 특수활동비 등 제도개선을 中央部處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內務部의 업무지연으로 이 제도가 아직까지 실현되고 있지 않은데 이로 말미암은 기피부서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內務局에서는 경력가점제도에 대해서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사항이라고 內務部에 핑계만 대고 있는데 監査室 勤務職員에 대해서 本議員이 알고 있기로는 근무 1년 이후부터 월 0.04점씩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그 근거가 뭔가, 監査室 職員에 대한 가점제도는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교통, 청소분야의 가점제도는 왜 시행령을 반드시 개정해야 이 제도가 시행되는지 關係局長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도시행을 위한 향후 추진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십시오.

다섯번째, 서울의제 21의 지연사유와 향후대책은 시간관계상 本議員의 서면질의와 답변은 직접 답변으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書面質問)

5. “서울의제21”의 지연사유와 향후 대책은?

서울시가 당초 96년 말까지 작성키로 한 지방의제 21의 지연사유는 무엇이고 향후 추진일정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金喜甲 議員;
여섯번째, 木洞 중심축의 도시설계 재정비, 94년 7월 28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 도시설계 재정비 자체가 도시설계의 지구지정에 사전 근거가 있고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진행된 불법적인 조치라는 점이 밝혀져서 本議員이 關係官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94년 4월 기준으로 서울市에서 추진한 11개의 도시설계 구역이 어느 곳 어느 곳이었습니까?
둘째, 당시 도시설계구역인 木洞 중심축의 경우 기타 10개의 구역과는 달리 도시설계의 지구지정이 제외된 채 이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木洞 중심축의 경우에 지구지정을 제외한 채 추진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세번째, 建築法에 의하면 도시설계는 도시설계 지구지정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작성케 되어 있고, 도시설계 지구지정은 都市計劃法 제18조와 同法施行令 제16조에 의해 도시설계 지구지정 절차를 밟게 되어 있는바,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추진된 木洞 중심축의 도시설계 재정비는 도대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넷째, 만약에 이러한 도시설계 재정비 자체가 불법이라고 한다면 94년 7월 28일 승인된 도시설계정비안은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그리고 다섯번째, 木洞 宅地開發에 소요된 전체 액수와 택지조성 이후의 수입금이 얼마인지도 밝혀 주시고요.
여섯번째, 최근 이러한 도시설계 재정비의 엉터리 재지정으로 말미암아 학교 옆 부지에 주상복합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민 8,196명이 지금 서울市議會에 청원을 제출해 놓고 있는데 이런 주민들의 법적 대응시에 그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敎育監께 묻겠습니다.

서울市敎育廳이 지난해 98개교의 안전진단 결과 54개교를 철거 및 개축대상으로 발표하였고, D급 판정을 받은 학교는 4개교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학교에 대한 조치내역을 밝혀 주시고,

또한 초등학생의 절반이 영어과외를 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서울市敎育廳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중학생들의 고교진학시 내신적용 추진실태에 대해서는 關係官이 답변해 주시고,

목동에 추진하고 있는 가칭 한가람고등학교의 신설 추진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內務委員會 所屬 金錫浩 議員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錫浩 議員; 金錫浩 議員입니다.

급류에 휘말려 떠내려가는 물 속에서 살아나가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도 급류 속에서 나올 수 없는 자의 처지와 다를 바 없는 오늘날의 地方議會의 현실 속에서 3대 4년이 지나고 4대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991년 3대 지방자치 탄생 당시부터 地方自治法 거의가 천부당 만부당할 정도로 잘못되었고, 모순투성이인 채로 오늘에

이르고 있음에도 순리를 존중하고 순종하여야 한다는 말대로 地方自治法들이 모순되고 대부분 크게 잘못되었으나 큰 정치권의 배신감 속에서 묵묵히 세월이 가면 세월에 따라 선진국과 같이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도 발전할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 몸을 태워가며 인간에게 길잡이가 되는 촛불처럼 천백만 서울市民들을 위해 議員 각자의 몸을 태움은 말할 것 없고, 가족들까지도 함께 봉사한다는 정신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先輩·同僚議員여러분, 그리고 趙淳 市長, 劉仁鍾 敎育監과 關係公務員 여러분, 매우 반갑습니다.

좋은 책 속에 좋은 내용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좋은 교육을 하고 앞서 가는 행정을 펼치려면 교육과제물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현재 서울市 공무원들과 서울市 교육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교육과제물이 어느 때 어느 시절의 과제입니까? 바로 이조시대 때 사용하던 과제라고 하여도 다를 바 없는 과제를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실보다 앞서 가는 행정교육과제는 되지 못한다 하여도 최소한 현실에 맞는 과제로 교육하여야 선진서울과 21세기 아세아권 태평양시대 중심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 趙淳 市長 취임 후 여러 차례 21세기에는 우리 서울을 아세아권 태평양시대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市長의 뜻을 시민들에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요즈음 市長이 발표한 서울市나 敎育廳에서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과제물로 아세아권 중심도시 선진도시로 진입할 수 있다고 市長은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습니까?

서울市는 많은 예산을 들여 선진 해외주재관까지 파견하고 있습니다.

파견된 도시에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市長께서 그 나라 발

전상을 보고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진국가 도시에 주재관을 파견근무하도록 함은 서울市도 선진국 발전상에 대해서 연구하여 서울市에 좋은 정책을 접목시킬 목적에 파견한 것으로 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市 공무원 교육이나 서울市敎育廳 교육과제나 선진국 발전상을 도입하여 공직자 교육에 접목시킨 사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도 근 5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제도도 발전적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은 서울市나 敎育廳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면에 대해서는 敎育廳은 더욱 심각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꿈나무들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서울市와 敎育廳 공무원들은 의회기능과 지방자치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꿈나무들을 가르치고 길러내는 교사들과 교사들을 지도감독하는 교장선생님들께서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아주 수두룩합니다.

지방자치가 잘 되고 민주화의 꽃을 활짝 피우려면 기초적인 꿈나무들에게 확실하게 지도하지 아니하면 40여 년만에 온 국민들의 염원 속에 핀 민주화의 꽃몽우리는 절대 확짝 피울 수 없다고 보는데 市長과 敎育監의 견해는 어떠하시고, 이에 대한 교육정책을 새롭게 다시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그리고 敎育監, 이곳 議會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서울市民들의 뜻과 마음이 집약된 장소입니다. 어떠한 일이든 市長 스스로 결정하여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되도록 地方自治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市長訓令이니 指示니 하며 일선 하부기관에 훈령사항들이 아주 남발되고 있습니다. 일선 하부기관에서는 한 수 더 떠서 행정적으로 지연 또는 행정낭비가 만연되어 있는데 市長은 알고 있으신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제 서울市는 여하한 임명직 市長 시절보다도 모든 면에서 나아져야 합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고 편안한 서울市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는데 임명직 市長 시절보다도 못하다면 시민들은 아주 실망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民選市長 선출 후 서류의 간소화는커녕 서울市長의 訓令이 남발하여 시급한 일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시민들을 괴롭힌다면 기본 뜻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좋은 법도 좋게 써야 좋지 좋은 법을 달리 이용한다면 악법이 될 것이요, 시민들에게 피해 줄 것은 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설치공사나 개량공사는 시민들을 위해서 개인이 아닌 水道事業所에서 입안해서 지상구조물 없이 도로굴착하여 공사하는 부분을 심의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공사나 철거공사 같은 일반업자들이 하는 공사장에 대해서 교통정리와 단속을 하는데 단속공무원들에게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려고 하는 뜻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데나 적용하여 남발한다면 바로 민폐요, 행정의 횡포입니다.

절차에 대해서 다 아시는 바대로 수도관매설 신규공사나 불량관 교체공사를 하려면 처음부터 입찰할 때까지 서울市 공직자들의 손에서 손으로 종결됩니다. 교통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계획 설계시부터 조건을 부여하든지, 도로굴착 심의시 조건을 부여하면 될 것을 굴착심의 후 다시 같은 區廳長으로부터 교통관리 심의를 한단 말입니까? 절대 행정낭비입니다.

건축공사장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한 訓令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면 議會의 승인, 즉 조례를 정하되 수도공사로 인한 부분은 제외할 것을 市長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건축공사장 또는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도 건축심의시에 같이 심의를 하여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하루속히 이와 유사한 모든 행정을 조사하여 행정편의적 시정을 펼칠 것을 촉구하는데 이에 市長의 견해를 확실하게 듣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일에서든 한 건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직자들의 인력이 소모되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찾아서 정리한다면 서울市의 인력은 물론이요, 많은 예산이 절감됨은 확실합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것을 市長께 제의합니다.

다음은 監査室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市長은 좋은 뜻을 발휘하려면 監査室 機構를 하루속히 바꾸십시오.

監査室 구조를 달리하지 않는 한 市長의 뜻을 발휘할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한국 백성들은 정에 약하다고 어느 소설가가 책에 발표했습니다. 그 뿐입니까? 한솥밥을 먹고 때로는 상하관계로 근무할지 모르는 구조적 입장에서 서울市 감사실 근무자들이 본래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없습니다.

報道에 의하면 市長께서는 잘못된 서울市 공직자들의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뜻을 언론보도에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하였고, 감사실 근무자들도 보강 발령하였습니다.

감사실 기능 발휘를 인사발령으로 보강한다고 하여 市長의 뜻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단순 발령입니까?

本議員은 구조적으로 市長의 뜻대로 될 수 없음을 명명백백하다고 보며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서울시 공무원봉급 사무관 이하 공직자들을 배 이상 올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직자 사후보장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실 직원들을 전문화하여 監査室을 市長 직속하에 두어야 합니다.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이북에서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우리 나라에 1년 중 최고 추운 겨울에 맨발로 죽음을 각오한 채 모든 부모 형제 버리고 이남으로 왔다는 보도를 市長께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울시 6급 기준 공직자 월급이 얼마입니까?

요즈음 서울에 3인 가족을 기준에 두고 비교하면 서울시 6급 이하 공직자 가정생활을 평균 수준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까?

市長께서는 통계적으로 조사를 하여 보고받아 더욱 잘 알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조적으로 서울시 공직자들 월급으로는 일반 평균시민들처럼 생활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절대 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보강되지 않는 한 監査室을 강화해도 기능발휘하려면 청렴한 공직자로 전원 물갈이해도 얼마 안 가서 균형은 흔들릴 것입니다.

현재의 서울市 조직 구조로는 소신껏 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신껏 하는 공직자는 서울市에서는 구조적으로 진급이나 모든 면에서 뒤떨어진 공직자가 됩니다.

우리 나라의 공직구조상, 서울시 공직사회의 구조상 상하관계를 원만히 유지하여 출세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이러한 상

황에서 소신껏 일하고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진정한 공직사회는 구현될 수 없습니다.
대안에 대해서 옳으면 하루속히 과감하게 개선책을 市長께서 발휘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진급에 얽매이지 않는 선진외국 공직사회처럼 본연의 일에 충실하고 사명감과 행복감을 갖고 편안한 직장애로 근무하도록 하루속히 조성하시되, 선진도시 공직자들처럼 상하관계에 얽매여 근무하는 사례가 없이 소신껏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진급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법적 연령까지 근무한 후 사회인이 될 때 사회보장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감사실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을 전문성있고 다른 부서와 인사교류가 없이 전문인력으로 보강할 때만이 정의로운 서울市 공직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本議員이 제시한 부분 중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市 공직자 6급 이하 봉급을 배 이상 올리라는 부분은 대한민국 정책상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市長께서는 國務委員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서울市 구조적인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를 한다면 언젠가는 이루어야 되고, 이룰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市長께 강력히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서울市議會 議員들은 여태까지 어떻습니까?
1991년 3대 議員으로 출발할 때 무보수 명예직으로 탄생하였고, 4년 의원임기 중 무보수명예직이 있을 수 없다는 대부분의 여론도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하여 당시 市長께서도 市長은 아니셨지만 공감을 천명하신 것으로 本議員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늦으나마 이 자리를 빌어 地方議員 全 議員을 대

신해서 그런 뜻을 천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당시 임기 중인 1995년 6.27 이전 國會에서 보좌관을 두도록 법이 신설되었고, 세비도 지급하도록 통과함을 市長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다만 6.27 이후 國務委員會의 施行令 검토과정에서 7월 1일자 보류되었으나 언젠가는 지방자치가 정착된 선진외국처럼 반드시 서울市議會도 정착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려워도 同僚議員님들이 인내하면서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듯, 市長께서도 앞서 市長께 건의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서울과 천백만 시민들의 뜻을 받들려면 이제라도 인내심을 발휘하여 근본 치유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본 건 질문에 대해서도 市長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도로로 기부채납받은 토지를 하루빨리 개설하여 서울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강동구 천호동 산 62번지, 산 63번지를 형질변경하면서 공공시설용지로 기부채납받은 도로용지를 하루속히 도로로 개설하여 시민들이 사용하도록 市長께 촉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관할구청인 강동구청에서 행정미스를 한 부분이 조사결과 명백히 밝혀지기는 하였으나 행정착오로 인하여 잘못된 행정은 바로 해 주는 것이 행정서비스의 정신입니다.

본 건은 1992년 주식회사 영진약품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강동구청에 접수하여 1993년 8월 30일 준공처리한 바 있습니다.

당시 허가규정으로는 형질변경함에 공공시설용지를 전체면적 중 20%를 기부채납받도록 서울市는 정하여 실시하고 있

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여 강동구청은 공공시설용지로 10m도로를 기부채납할 것으로 조건을 부여하여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허가를 하였고, 토지주의 조건완료로 준공처리된 건으로서 기부채납한 토지주와 인근 주민들의 본래의 목적인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민원을 제기하여도 서울市에서는 다시 관할구청에서 매입하라는 것은 기본 뜻에 크게 위배되는 사례로서 하루속히 기부채납받을 때의 목적대로 관할구청에 돌려줄 것을 市長께 촉구합니다.

다만, 추후 본 건 전체에 대해서 행정절차와 그 밖의 잘못된 부분은 철저히 감사하여 잘못되고 모순된 부분이 있으면 관련 공직자들을 철저히 색출하여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다면 관련 형질변경을 할 때는 20%를 공공시설용지로 받도록 그 당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심의했고 강동구청에서 여러 방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할 당시에 공공시설용지로 기부채납받되 반드시 도로로 받아라 이렇게 심의과정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또 조사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위허가자로부터 기부채납받을 때에 도로로 개설완료 후 기부채납받은 후에 그 목적물을 준공했다면 지금에 와서 약 5,000만원 돈의 도로개설비용이 안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5,000만원이 지금으로 봐서는 서울市에서 행정낭비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관련된 공직자와 그 업자들하고 결탁되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監査室長, 이 부분을 확실하게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사해서 명백히 이 자리에서 이후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동안 監査室은 1년의 監査室 業務에 대해서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설정해 놓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청에도 근 3년 동안 수없이 감사를 나갔을 것입니다. 監査室은 뭐 했습니까, 그 동안? 허수아비였습니까? 이 부분도 반드시 市長은 監査室까지 엄히 색출해서 문책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긴시간 동안 同僚議員과 本議員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市長 이하 서울市 公務員들은 다른 업무를 못 보았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本會議時 많은 議員들이 대안제시를 하였고, 이 시간 이후 市長께서는 시민들의 대변자인 議員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同僚議員들이 질문을 하고, 대안제시를 하는 내용들은 모두가 진지하였습니다. 市長의 답변도 그 동안 진지하였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답변을 한 후 이 장소를 떠나면 공염불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市長의 답변은 공수표가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同僚議員께서 환경문제인 자연습지 생태계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전문교수까지 동원 조사하여 市長을 상대로 건의하였습니다. 그 질문에 市長도 감탄하셨고, 同僚議員의 질문 뜻에 긍정적으로 답하시는 것을 관심 있게 경청하였습니다.

그 후 매우 관심이 있는 터이라 해당 區廳과 해당 部署를 추적하여 결과를 알아본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발견하였습니다. 당시 이 자리에서 진지하게 답변한 본 건이 조금도 검토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市長의 약속은 모두 공수표입니까? 議員들의 질문을 공염불로 생각하십니까?

서울市 주체자는 시민들입니다. 서울市議員들의 목소리는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는 말입니까? 서울市 구조를 하루속히 바로잡으세요.

앞서 지적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議員들이 질문하고 市長께서 답변하는 부분을 일회용으로 그치지 말고 꾸준히 연구하고 검토하는 풍토를 하루속히 정착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자연습지 보호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市長의 견해를 진지하게 이 자리에서 듣고자 합니다.

오랫 동안 경청해 주신 同僚議員과 關係公務員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네, 지금까지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여섯 분 議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執行部側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2時 53分 會議中止)

(14時 44分 繼續開議)

○議長 文一權;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오전 여섯 분 議員의 질문에 대하여 執行部側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關係公務員들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趙淳 市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趙淳; 존경하는 文一權 議長, 그리고 議員 여러분, 제93회 市議會 臨時會를 맞이하여 議員 여러분의 소중한 조언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禹元植 議員을 비롯한 여섯 분의 議員께서 시정의 전 분야에 걸쳐 폭넓은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운영방향과 市長의 소신에 관련된 사안, 그리고 시정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市長이 답변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분야별 주요시책사업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副市長과 關係官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禹元植 議員께서 2000년대 서울市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환경정책의 기본이념과 시책방향 등을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환경정책의 기본이념은 지난해 5월 20일 공포한 서울特別市環境基本條例에 규정된 대로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서울을 만듦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선시정 출범 이후 우리 시는 환경이 시정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시정의 근본이라는 생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정책배려를 대폭 강화하여 왔습니다. 지난해 1월 15일 단행한 조직개편을 통해 環境管理室을 설치하는 등 조직과 인력, 그리고 예산을 대폭 확충하였으며,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녹색서울시민감시단 등을 구성하여 시민과 함께 환경문제를 풀어가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환경헌장과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 환경보전 장기종합계획 등을 수립하여 부문별 환경정책의 기본방향과 시책들을 뚜렷하게 마련하였습니다. 우리시가 이와 같은 환경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으로 삼고 있는 시책방향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도시계획, 주택, 교통 등 모든 행정분야가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재개발, 도로건설, 주거단지건설 등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지침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교통문제 해결방안으로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수요관리정책을 도입한 것도 역시 교통뿐만이 아니라 환경을 함께 고려한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로 시민과 함께 환경문제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등이 구성되어 활발하게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민참여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과 참여 여건조성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환경에 관한 정보를 적극 공개하기 위해 환경오염 종합감시망을 구축하고 환경백서를 발간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전산망을 통해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서울市의 특성에 맞는 환경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서울市의 특성에 맞는 대기환경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해 市立大學校에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중에 공청회 등을 거쳐 전국기준보다 강화된 서울市의 대기환경기준을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서울市의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 독자적인 조례를 제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서

울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서울의 대기오염은 그중 80.7%가 자동차 배출가스가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공기를 맑게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市는 이를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를 서울市가 할 수 있도록 하는 關係法令의 개정, 경유자동차 등의 등록의 제한, 저공해 차량의 세제혜택, 자동차 배기가스 총량규제 제도 도입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종합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中央政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서울市에 맞는 실효성 있는 환경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행정의 전문화를 계속해 강화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전문인력의 확보에 대해 힘을 기울임으로써 관련 행정분야가 보다 전문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하천수질, 자동차 배출가스, 음식물 쓰레기 등 세부 분야별로 전문인력에 의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현재의 保健環境硏究院을 보건연구원과 환경연구원으로 분리하여 환경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하는 별도 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鄭炳權 議員께서 제3후보와 관련하여 저의 정치적 소신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市議會 臨時會에서도 비슷한 질문에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와 관련한 제3후보 논의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가설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가설에 불과한 논의를 놓고 공식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며 의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라와 사회가 이처럼 어려운 시점에 지방자치를 지켜내고 시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줘야 한다는 운명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초대 民選市長으로서 이 일에 신명을 바쳐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으며 배전의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시정에 매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鄭炳權 議員께서 제3기 지하철 건설 재원대책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기 지하철은 9호선에서 12호선에 이르는 4개 노선, 총 연장 120km로서 96년 12월 기준 가격으로 9조 1,0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94년 6월에 기본노선망을 확정하고 현재 지질조사, 현황측량, 정거장 위치 선정 등 기본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2기 지하철이 99년까지는 완전히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제3기 지하철은 사업효과가 높은 9호선과 3호선 연장구간 등에 대하여 조기착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기 지하철의 무리한 건설은 서울市의 재정상태를 크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면밀히 고려하여 재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근본원칙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中央政府에서 건설비의 50% 정도는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하철은 서울시민을 위한 시설인 동시에 국가 기간시설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으며,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파리, 런던, 뉴욕의 지하철 건설에 있어서는 50% 내지 75%의 비용

을 中央政府가 부담한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서울 지하철건설에 우리 中央政府가 50%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현재 中央政府와의 협의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한 다각적인 노력을 모두 기울여서 서울市의 입장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李英順 議員께서 어린이 충치예방을 위해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돗물에 적정량의 불소가 있는 경우에는 6세부터 13세 이하 어린이에게 충치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 1945년부터 미국, 캐나다 등의 일부 도시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여 현재 67개국의 일부 도시에서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일본에서는 1952년부터 1972년까지 2개 도시에서 불소를 투입하여 왔으나 충치예방효과의 정확한 증거가 없어서 사용을 중지한 바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李英順 議員께서 말씀하신 대로 保健福祉部에서 81년부터 진해시와 청주시를 수돗물 불소화 시범도시로 선정하여 국비보조를 하고 있으며, 그 후 과천시와 포항시에서도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돗물 불소화에 대하여는 이를 반대하는 주장도 상당히 있습니다. 우선 영구치아가 나기 시작하는 13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에는 충치예방효과가 있지만 성인의 경우 거의 그 효과가 없으며 불소를 다량 섭취할 때는 체중의 감소, 근육의 경련, 골경화증, 신장 및 갑상선 기능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보고가 保健福祉部의 음용수관리지침에서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경우는 불소 투입으로 인한 수질변화로 하천 생태계나 수중 생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연구결과가 거의 전혀 없다는 것과 의료 및 산업시설에서 불소가 필요없는 경우에 불소 제거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시범실시하고 있는 진해시와 청주시에서의 조사결과에서도 불소를 투입한 시범도시의 충치보유율이 불소를 투입하지 않은 도시의 충치보유율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는 증거제시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돗물 불소화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명확한 이론이 정립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우선 13세 이하 어린이의 음용수에 한해서 불소를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서울市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市敎育廳 산하 학교보건원에서 서울시내 初等學校를 대상으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95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市 各 區 보건소에서도 금년 4월부터 유아원 원아를 대상으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좀더 진행되어 그 효과가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서울市에서도 수돗물을 불소화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李容富 議員께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옆 노외주차장의 처리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학교용지이지만 현재 400 여 대 규모의 노외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발표한 공원녹지확

충5개년계획에 의하여 농촌풍경이 가득한 도심지 농촌공원으로 조성하여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시민의 쉼터로 활용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작년 12월에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4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李議員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 공원조성 공사를 하기 위한 시설비가 작년 예산안 심의 당시 전액 삭감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금년 추경시에 삭감된 시설비를 다시 계상하여 시설비가 반영되면 당초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대로 도심지 농촌공원으로 조성하는 공사에 바로 착수할 것입니다.

江南區에서는 李容富 議員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상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을 희망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서울市 정책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고 그 내용을 江南區에도 공문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주차장 건설을 검토할 계획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金喜甲 議員께서 지하철 안전도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의 안전확보는 우리 市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하고있고 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운행중에 있는 서울市 지하철의 안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말하는 사고라고 하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탈선이나 충돌이나 터널의 붕괴 등 문자 그대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이며, 다른 하나는 단전이라든가 또

는 열차상의 고장, 이것 등으로 운행이 일시 정지되는 운행장애를 지칭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이 두 가지를 엄격히 구별해서 전자를 사고라고 하고 있고 후자를 기술적 장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하철의 경우는 1호선이 개통된 74년 이래 지금까지 큰 사고는 한 건도 발생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장애 역시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92년에 25건, 94년에 23건, 95년에 19건, 96년에 16건, 이렇게 운전장애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운전장애는 외국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항상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를 줄여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고는 부실시공 등 시설자체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관리 때문이라고 보며, 서울의 지하철은 매일 전 노선에 대한 도보점검과 정기적인 정밀점검 등을 통해서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의 우려는 아주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이 노후되면 사고나 운전장애 요인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를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안전분야의 기술을 계속하여 발전시키고 전문인력 등을 보강해 나감으로써 시민안전을 확보하는 데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錫浩 議員께서 공무원 교육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교육의 선진국 발전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말씀에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市에서는 국제적 감각과 경쟁력을 갖춘 전문행정인을 양성하기 위해 국외 훈련자를 선발하여 현재 30명이 美國, 그리고 日本 등 외국에서 교육을 받

는 중에 있고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강좌를 개설하여 281명이 현재 수강중에 있습니다. 선진외국의 현장체험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금년에도 450명에 대해 해외여행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金錫浩 議員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정의 각 부문에 있어서 선진외국의 행정제도에 대한 교육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유럽의 자치제도, 日本의 교통행정, 시드니의 환경정책 등 분야별 선진행정 교육과정이 아직까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 市에서는 美國 등 4개국에 파견된 6명의 주재관으로 하여금 주재국의 행정정보를 정례적으로 보고하도록 제도화하여 보고내용을 격월간 책자로 발간 배부하고 있으며 귀국보고 및 토론회를 연 2회 정례화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서울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 등을 강사로 모시고 각국의 지방자치제도 등에 대한 강의를 들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근무 경험이 있는 공직자가 늘어나는 등 여건이 조성되면 공무원교육원에서의 정규과목 개설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의회기능과 지방자치에 대하여는 市 公務員敎育院 전문교육과정에 의회실무과정을 이미 개설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례조례와 수시로 실시되는 직원교육시에도 지방자치의 의미와 공직자의 의식전환 등에 대해 지속적인 강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오전 시정질의 시간에는 敎育監이 계시고 오후에 행사가 있다고 알려왔었습니다. 그래서 敎育監 답

변은 副敎育監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副敎育監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李元雨; 먼저 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敎育監께서 오래 전에 예정된 교사연수의 참석관계로 副敎育監인 제가 답변드리게 된 데 대하여 널리 이해해 주기기 바랍니다. 敎育廳 업무에 관한 질의중 포괄적인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室·局長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李英順 議員님께서 경기여상의 소요사태와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기여상은 93년도에 각종학교에서 정규학교로 개편된 사학으로서 지난 95년도에 학내 소요가 있었고 다시 금년 3월 10일부터 학생들에 의한 소요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10명의 교사들이 학교비리를 언론에 폭로하고 다수 교사들이 이에 가담함으로써 6일간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 우리 敎育廳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93년과 94년 2년 동안에 159명의 정원을 초과 모집한 사실을 밝혀내고, 한편 학교비 변태지출, 금품수수, 공금유용 및 찬조금 부당징수 등 비리를 적출 시정조치하고, 비리에 관련된 교장 외 교사 2명과 서무부장을 해임시키고 교사 13명을 징계하였으며 96학년도 신입생부터 4학급을 감축 조치하였습니다.

금년 3월 10일에는 학생간부들이 신임교감 및 주임교사의 사퇴와 학교법인의 비리를 들어 관선이사 파견 및 학교의 공립화를 요구하는 등 수업거부 사태가 일어났으며 우리 敎育廳에서는 즉시 특별감사반을 파견하여 현재 감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번 사태는 95년도 학내사태 이후 양측 교사들 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된 가운데 신임 교감 임명 등 인사문제에 대한 불만으로 야기되었고 학생간부들이 이에 동조하여 수업거부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양측교사들의 첨예한 대립상태와 학생간부들의 태도로 보아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나 학교장 책임 아래 조속히 수업이 정상화되도록 최대한 촉구하겠으며, 현재 진행중인 감사결과 만일 학교법인 및 학교의 비리와 문제점이 적출되면 법에 따라서 엄중히 조치하고 조속히 학교가 정상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金喜甲 議員님께서 초등학생의 절반이 영어과외를 받고 있다는 충격보도에 대한 敎育廳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金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초등학생의 영어과외 문제는 저희들도 함께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초등학생들의 영어과외는 영어가 초등학교의 정규교과로 되기 몇 년 전부터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어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러한 욕구현상은 학교에서 정규교과로 교육이 실시되면 진정되어야만 정상일 텐데 시행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과외현상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 敎育廳은 3·4월 중에 학교별로 학부모, 지역인사, 學校運營委員 등을 대상으로 영어수업을 공개하여 영어교육과정의 수준을 이해시키고, 방과 후 교육활동 및 특별활동, 학교의 재량시간을 이용한 영어학습 기회를 확대하여 영어에 대한 학습욕구를 충족시키며, EBS 초등 3학년 영어시간 활용을 통한 보충 심화학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별도의 과외를 시킬 필요가 없음을 알리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용 홍보자료를 제작,

지난 2월부터 배포하였고, 이후 各 地域敎育廳과 학교급별로 학부모 홍보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학부모의 영어학습 욕구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여 사교육비를 줄여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喜甲 議員님께서 96년도 시설안전진단 결과 54개교가 철거 및 개축대상으로 판정되었고, D급 판정을 받은 학교는 4개교에 이르는데 이들 학교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敎育廳에서는 학교시설의 안전관리 및 학생 사고예방을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자체 技術職公務員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 진단결과 판단이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부터 96년까지 외부 전문기관의 정밀 안전진단 및 자체 진단결과 77개교가 개축대상 건물로 판단되어 현재 5개교는 이미 개축을 완료하였고, 42개교는 개축을 위한 설계 또는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30개교에 대하여는 98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97년 3월 현재 불안전시설 현황은 D급 10동, E급 1동으로 E급 건물은 이미 철거 완료하였고, D급 10동은 위 개축계획에 포함하여 현재 개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敎育廳에서는 금년부터 자체 技術職公務員과 기동차량 및 전문장비를 갖춘 시설안전점검기동반을 편성·운영함으로써 학교시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金錫浩 議員님께서 議會의 기능과 地方自治에 대한 교육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地方自治가 잘 되려면 학생은 물론 교원이 議會의 기능과 地方自治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金 議員님의 의견에 동감하면서 地方自治와 관련한 학생 및 교원교육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생들에게는 각급 학교 정규 수업시간을 통하여 議會와 地方自治制에 대하여 지도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의 경우 회의할 때 지켜야 할 태도, 고장사람들을 위한 機關과 團體, 우리 市·道의 생활개선과 자치생활, 자율적인 시민생활, 그리고 민주국가로의 발전이라는 단원시간을 활용하여 수업에서 지도하고 있으며, 중학교의 경우에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정과 요소, 政府의 구조와 기능, 地方自治와 民主主義 단원시간을,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시민사회의 형성과 발전, 민주시민의 사회참여, 현대시민의 사회참여, 현대 시민생활과 민주정치, 그리고 시민의 정치참여와 정치과정 단위시간을 통하여 議會의 기능과 地方自治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한 학생의 활동을 통하여 議會의 기능에 대한 실제 체험을 갖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사, 교감, 교장 등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는 현재 서울市 敎員硏修院의 연수과정에 교육자치, 學校運營委員會 運營 등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원연수 프로그램에 議會의 기능과 地方自治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일반 연수시에도 議會의 기능과 활동내용을 널리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市議會 참관계획도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行政1副市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1副市長 姜德基; 안녕하십니까? 行政1副市長 姜德基입니다.

먼저 禹元植 議員님께서 서울市 쓰레기정책과 관련해서 감량과 재활용을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첫째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견해는 무엇이냐라는 질문과 청소예산 중 감량, 재활용에 관련된 예산이 좀 부족한데 이런 데에 대한 예산배정이 서울市 폐기물정책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는지와 재활용품 처리에 대한 근본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 행정상 감량문제와 그리고 재활용문제는 첫째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데 대한 견해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市는 폐기물처리의 기본방향을 다음 몇 가지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첫째, 폐기물의 발생 이전에 폐기물을 되도록이면 원천적으로 발생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감량화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것과, 그리고 발생된 폐기물은 분리배출을 생활화해서 재활용률을 높여야 되겠다하는 것이고, 세번째는 최종처리할 폐기물은 현재의 매립처리위주에서 資源回收施設 技術을 보다 더 향상 도입 내지는 확충하여서 가연성쓰레기는 소각 후 소각재와 불연성쓰레기만을 매립함으로써 매립지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장시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며, 끝으로 폐기물의 신속한 수거체계 확립과 폐기물처리시설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서 시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議員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저희들은 동감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청소예산 중에서 감량, 재활용관련 예산이 미흡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市의 폐기물정책은 감량, 재활용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폐기물의 감량사업은 시설의 건설 등 투자보다는 시민의 참여와 또 시민의 지속적인 실천이 중요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교육이나 홍보 등 비예산사업 혹은 적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임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의 수집 운반은 自治區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市의 재활용분야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市에서는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해서 100억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해서 재활용산업자에 대한 장기저리융자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금년도에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운반에서부터 재활용산업 육성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재활용대상물의 이용도를 높이고, 또 폐기물의 발생을 유발한 원인자가 이를 수거 또는 처리하는 등 통합 재활용체계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통합 재활용체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폐기물처리 차원에서 현재 관계기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므로 이의 조속한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 우리 市에서도 이에 맞춰서 예산의 투입 등을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각 自治區別로 재활용집하장과 재활용센터를 확대하고 운영을 개선하며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재활용률

을 높이도록 하고 자원회수시설 내에 재활용시설을 함께 설치함으로써 市 정책 방향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李英順 議員님께서 공원녹지정책에 대하여 여의도광장, 영등포구 시립병원, OB맥주공장, 한강 고수부지 등이 永登浦區에 집중되어서 특정지역에 대한 편파적인 예산의 투입이 아니냐, 또 지역단위로 균형있고 형평 있게 공원을 조성하여 서울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李 議員님 말씀이 충분한 근거가 있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市의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으로 하는 환경친화적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천적 계획임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본방향으로는 市 외곽에 위치한 자연녹지상태의 공원보다는 녹지가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원녹지를 확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서 永登浦區의 구 시립병원과 같이 市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시유지가 아닌 곳은 공장의 이적지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96년에 시작해서 2000년까지 공원화사업을 52개로 우선 확정하고, 또 서울市 전역에 걸쳐서 공원녹지를 확보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광장 등과 같이 1개 區에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특정지역에 대한 편파적인 예산 투입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永登浦地域은 현재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원용지가 비교적 협소하여서 대부분 소규모 어린이공원으로서 근린공원은 4개소 밖에 없고, 특히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은 25개 自治區 중에서 하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의 확충이 비교적 우선적으로 요망되는 지역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특히 여의도광장을 공원화사업을 하는 것은 지난날 20여 년간 아스팔트상태로 관리되어 온 여의도광장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숲과 그리고 잔디, 그리고 물이 어우러진 녹색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환경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시민의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세계도시의 대표적인 공원들과 견줄 수 있는 서울의 대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여의도광장의 공원화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의도광장의 공원화사업은 永登浦地域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서울의 대표성 있는 공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이해하셔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衿川, 九老, 江西, 城東區 등 생활환경이 비교적 좋지 않고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도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서울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면서, 우선 금년에 추진하는 주요 공원녹지확충사업은 공장이적지, 또 공공시설 이적지 공원조성, 마을마당 조성 등 35개 사업으로 가급적 지역 단위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議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녹지가 부족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공원 조성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더 많은 공원조성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원 배분에 배

려를 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金喜甲 議員님께서 저희 지하철노조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地下鐵公社의 노조에 대한 대응지시와 지하철노조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라는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地下鐵公社는 잘 아시다시피 서울 시민의 대중교통난 해결을 위한 지하철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되도록이면 편리한 지하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의 관리와 또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그리고 운행의 정시성 확보 등 이의 기능이 최대한으로 유지되도록 해 나가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니 만큼 근무여건 개선 등 노동운동도 시민생활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전개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地下鐵公社에 근무하고 있는 책임 있는 간부는 노조와의 사이에 보다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각자가 소임을 다해 나감으로써 시민과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文一權 議長, 李善宰 副議長과 司會交代)

○副議長 李善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企劃管理室長 都明正입니다.

먼저 鄭炳權 議員께서 市 산하 지방공기업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鄭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행 地方公企業法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을 설

치 운영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가 하는 방법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 획일적으로 지방공기업 설치 대상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적용하는 데 매우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을 우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에 청소, 하수도 등의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소, 하수도 등의 사업에 있어서는 수익자부담원칙, 사업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데, 시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측면에서 서비스 제공 기회를 넓히는 점에 더 중점이 두어져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것을 공기업화할 때는 주민부담, 예를 들어서 요금의 현실화 등으로 해서 주민부담이 더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만큼 청소행정이나 하수도시설 확충 등에 어려움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운영형태가 市民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의 공공성이나 또 그 사업의 기업적인 성과 등을 조화있게 검토해서 결정해야할 것으로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鄭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유의해서 지방공기업화 내지 제3섹터 도입 등 다각적인 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아울러서 현행 사업 추진에 있어서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自治區 지방공기업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自治區에서는 강서, 송파, 성북 3개 區廳이 공사, 또는

공단을 설립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自治區에서 지방공사 공단을 설치하는 것은 區廳長이 주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주 주민편익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판단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自治區에서는 가능한 한 재정자립이 가능한 부분은 공사 내지 공단설립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경영합리화와 주민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느냐 하고 물으신 데 대해서는 공사 공단의 운영과정에서 어느 정도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自治區의 지방공사나 공단에 대해서 서울市長의 지도 감독권은 현행 地方公企業法上 사장에 대한 임명승인권과 그리고 소액의 사채 및 차관도입에 따른 기채승인권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일반적인지도 감독권은 행사할 수 있는 法的인 근거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地方自治團體의 고유사무에 속한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現行法上은 內務部長官이 설립인가를 비롯해서 여러 모로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自治團體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議員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동안 內務部에 이 法의 개정을 수차례 건의해 온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法 개정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공기업을 전담하고 감독해야 할 서울市의 본청 기구가 없다 그래서 전담기구를 신설해서 감독기능을 전문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市의 공기업에 대한, 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업무

는 업무적인 감독은 주관부서에서, 그리고 예산결산에 대한 것은 企劃管理室에서 총괄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의 업무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地域經濟局의 農水産流通課에서, 그리고 施設管理公團에 대해서는 建設行政課에서, 地下鐵公社에 대해서는 交通企劃課에서 업무의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議員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전담부서를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市 산하 6개 공사 공단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는 이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공사 공단에 대해서 기능별로 전문적인 업무 지도 감독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처럼 주관부서에서 업무감독을, 예산면에서 企劃管理室에서 총괄 조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방법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李容富 議員께서 議員님들의 요구자료 제출시에 작성일시라든지 작성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는 행정실명제, 자료실명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는 議員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자료에 작성자의 성명을 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표기를 해서 자료에 대한 의문이나 보완사항이 있으면 즉시 연락을 해서 보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실명제를 추진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金錫浩 議員께서 서울市의 훈령정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市에서는 현재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406건과 훈령 83건이 있습니다. 이런 자치법규와 훈령은 上位法令의 개정

이나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개정이 필요하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저희들이 적출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자치법규 178건과 그리고 26건의 훈령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 훈령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정조직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하급관청에 대해서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하기 위해서 발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하급관청을 구속합니다만 일반 國民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례도 나와 있고 학술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서울특별시도로공사장교통관리규정은 조례로 격상을 하는 그런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공사장교통관리규정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서울市의 교통상황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건축 공사장이나 일반 공사장에서 자재를 도로를 무단 점용해서 적치를 한다거나 또 안내표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거나, 우회도로 표시를 잘 하지 않아서 교통처리에 더욱더 어려움을 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공사를 할 경우에 공사 착공 전 30일 이전에 주변의 교통관리를 위한 자체 자재적치 문제라든지 안내표지 등에 관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金喜甲 議員께서 서울市 상징마크와 관련해서 모방의 의혹이 있다 하는 지적을 주신 데 대해서 오늘 公報官이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서울市의 새휘장은 그 동

안 다양한 여론수렴 경로를 통해서 공론화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작품의 독창성과 그 의미에 대해서 여론의 검증을 거쳤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과정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난해 5월 21일부터 7월 15일까지 실시한 시민 공모작품 1,819점과 전문가 작품 400점 등 2,200여 점의 작품 중에서 우리 휘장자문위원회, CI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최종 후보안 5점을 선정을 하였고, 또 이 다섯 점의 후보안에 대해서 公聽會 그리고 市民 6만 여명과의 직접 접촉을 통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수정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휘장은 어느 한 개인의 독창적인 작업이라기 보다는 공론화를 통한 천백만 서울 시민 전체의 작품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서울市 諮問委員 20분입니다만 이 분들은 모두 우리나라에서는 디자인 분야와 學界에서 權威와 專門性을 지닌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토론 과정 자체가 金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모방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200여점의 작품과 최종 후보안 5점이 대부분 서울의 상징물로서 산, 해, 강, 숭례문 등을 소재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金喜甲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신영복 교수의 서체, 「서」「울」도 그러한 구도를 설정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비슷한 구도로 설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모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디자인계와 서울市 휘하의 諮問委員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市에서는 향후 발생 가능한 일부의 모방시비와 무단사

용에 대비해서 지난해 8월 28일자로 5개 시안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해 10월 7일자 확정된 상징마크를 特許廳에 등록 출원을 해서 등록을 완료한 바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善宰; 企劃管理室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環境管理室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室長 卓秉伍; 環境管理室長 卓秉伍입니다.

禹元植 議員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議員님께서 環境管理室 소관 14개 항목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市長님과 行政1副市長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이외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議員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禹元植 議員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禹元植 議員님께서는 서울市 쓰레기정책에 관련해서 첫째, 서울市의 자원회수시설 건설이 재활용 쓰레기까지 모두 태울 수 있는 과대한 건설계획이 아닌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5년도 자원회수시설 건설계획 수립시에는 종량제 실시 이전이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 통계자료를 참고로 自治區에서 시설 규모를 과다하게 건의해서 설계가 된 점이 일부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市에서는 쓰레기 발생량의 변화 추세와 재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제는 적정 시설 규모를 확정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2001년까지 실제 소각량 1일 4,850톤과 예비 소각량 1,450톤을 포함해서 전체시설 규모 6,300톤을 확보해서 소각률을 37.3%로 이렇게 높이는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環境部 지침에 의하면 소각률을 50%까지 확보를 해

야만 매립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市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37.3%의 소각률은 무리한 계획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각시설에서 처리되는 쓰레기는 감량과 재활용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면서 재활용이 곤란한 그러한 쓰레기만 저희들이 소각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각시설과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우리 市가 적용가능한 최신의 신기술을 도입해서 소각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각시설을 환경친화적으로 건설하겠다 하는 것을 다짐해 드립니다.

둘째, 감량과 재활용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의 소각장건설 계획을 수정 축소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중기 재정계획 연도화 작업시에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에 의한 自治區別 발생량의 추이를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음식물 쓰레기 등 재활용 기술을 개발 그리고 소각 방법의 신기술 매립지사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총 소각시설을 科學的으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각 自治區別 연도별 감량목표를 설정해 주고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쓰레기 처리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市의 폐기물 처리 중기 목표의 감량목표는 1인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재활용품을 포함해서 97년에는 1.2kg에서 2001년에는 先進國 수준인 1.1kg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목표를 1일 800톤을 정하고 있고 재활용품 처리 목표도 1일

4,240톤으로 自治區의 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목표를 설정해서 自治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폐기물의 처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自治區別로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원활한 쓰레기가 처리될 수 있도록 재정과 행정지원을 금년부터 더욱 강화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넷째, 퇴비와 처리기기 구입 계획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값이 비싸고 완전하게 아직 검증이 안 된 기계를 많이 설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가정이나 음식점 등 배출 현장에서부터 감량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동주택이나 급식을 하고 있는 初等學校 등의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市와 自治區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요 사역비는 自治區에서 自治區 실정에 맞도록 예산을 40억원을 확보하고 또 우리 市에서도 自治區를 지원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12억원을 확보해서 각 區마다 5·6,000만원씩 현재 지원을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은 고속 발효를 해서 양을 줄이는 것, 그리고 건조해서 줄이는 방식, 그리고 아주 양을 완전히 없애는 소멸방식 등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環境部에서 공인 연구기관으로 지정한 生産技術硏究院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기계를 K마크 품질인증을 해서 지금 全國的으로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기계가 완전히 100% 성능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양을 줄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고 이제 악취

라든가 부패로 인한 住民 民願이 거의 줄어졌다 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기기를 시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또 구입할 수 있도록 瑞草區 管內의 瑞草區廳 廣場에 지금 전시를 하고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현재 檢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自治區에서는 이와 같이 K마크 품질인증을 받은 감량화처리시설을 구입하고 또 설치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째, 쓰레기 처리순환 메커니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삶회 등 有機農家에 대하여 江北區 등 4個區 14개 지역에서 1만 5,000여 가구에서 발생되는 하루 음식물 쓰레기 약 20톤을 분리수거해서 농장에 공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삶회로부터 발생되고 있는 또 생산되고 있는 그 有機農産物을 우리 서울市 시민들이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공동주택 퇴비화시범사업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서울市에서 시책을 확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首都圈 有機農家의 음식물 쓰레기를 지난해 4만 2,000 가구에서 금년에는 약 10만 가구를 목표로 해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와 퇴비화에 대한 아직 완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험검증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료화공장과 지렁이농장 등에도 자원회수시설 건설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광산구의 사료공장을 우리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많은 적자를 보기 때문에 우리 行政機關에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렁이농장도 1일 4.5톤 처리규모로 이것은 많은 노하우가 있어야 되기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市에서도 96년도 퇴비화사업을 蘭芝島에 검

증을 하고 있습니다만 97년에는 1일 30톤 처리규모로 江東區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범공장을 저희들이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여덟번째는 廢棄物 管理行政을 단순한 청소행정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公職者들의 의식을 앞으로 많이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질문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 부하를 줄임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절약하면서 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의 관리를 단순히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발생 이전단계부터 事前的으로 관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우리 公務員들과 우리 시민들도 모두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감량하는 데 최우선 정책을 두고 市民運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鄭炳權 議員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이나 자원회수시설을 통합해서 별도의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거나 이왕에 설립된 우리 서울市 地方公社나 公團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은 현재 서울市集團에너지供給事業의施行및業務委託等에關한條例에 의해서 서울市가 에너지관리공단에 현재 수탁운영중에 있고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은 현재 서울市가 직접 건설하고 운영은 建設會社나 專門 用役會社에 위탁운영하고 일반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議員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경영합리화와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해서 통합관리하는 방안은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과 자원회수시설이 대부분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 업무가 고유업무로서 특수성이 있고 또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하며 투자재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통합관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關聯機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추진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容富 議員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大氣汚染의 실태와 이에 대한 획기적인 改善對策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市長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대기오염실태는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아황산가스와 먼지 발생량은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자동차가 급격히 증가해서 大氣汚染物質 총 배출량의 약 80.7%를 차지하기 때문에 일산화질소와 이산화질소, 오존 오염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느끼는 오염체험도는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획기적인 대기오염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맑은공기보전10개년계획을 96년부터 2005년까지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황산가스의 지속적인 감소를 위한 연료전환과 또 아황산가스 저감을 위한 청정연료 확대보급, 도시가스 등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약해서 생략을 해 드리고, 먼지 저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광로, 중로, 대로 전구간 1,629km에 대해서 3

월 3일부터 도로 물청소를 현재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大氣汚染의 81%를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자동차오염개선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곧 발표하고, 추진을 강력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작경유차에 대한 매연배출 허용기준을 95년도의 40%에서 96년도에는 35%, 98년도에는 25%로 강화함으로써 제작단계부터 低公害車輛의 생산을 유도하기로 環境部와 합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소형경유차의 연료를 점차적으로 오염물질 발생이 적은 LPG로 매년 1만대씩 교체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시내버스 배차시에는 고성능엔진버스로 교체를 99년까지 마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말씀드린 대로 매연후처리장치 청소차량에 대해서 1,650대는 5월까지 마치고 하반기는 시내버스 약 2,800여대에 대해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100억원을 이미 확보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운행차뿐만 아니라 98년부터는 신규차에 대해서도 環境部, 建設交通部와 협의해서 매연후처리장치를 미리 부착을 해서 출고하는 방향으로 의무화를 시키는 것이 관계부처간에 거의 협의가 완료단계에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 배출가스의 근원적인 저감대책을 추진하면서 이제 우리 市에서는 自治區와 합동으로 10개반 50명으로 구성된 자동차배출가스상설단속반을 4월부터 편성·운영해서 노상과 차고지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喜甲 議員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金 議員님께서는 지정 보호수 200주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

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市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53개소에 200주의 보호수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수는 市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나무 34주와 구나무 52주, 동에서 지정한 동나무 52주, 마을나무 62주 등이 있습니다. 보호수 관리는 산림청 예규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 각 자치구와 시 경비부담 원칙에 의해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市에서 30%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관리실적으로 96년에 자치구에서 약 1억 7,000만원으로 보호수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우리 시비는 약 2,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자가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각 자치구에서의 비용이 적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자치구 예산으로 지정 보호수를 관리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택가, 도로변 등 생육공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수세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 市에서는 금년도에 보호수 유지관리 방안 조사용역을 실시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호수에 관련된 유래나 전설을 조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호수별로 피해원인을 정밀 조사해서 수세회복 처리방법과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자치구와 협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보호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의제 21 추진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의제 21은 92년 6월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어서 범지구 차원으로 지방의제 21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의제 21 작성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를 전제로

하는 만큼 우리 나라의 경우도 대부분 96년부터 지방의제 21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市에서도 민선자치가 시작된 95년말에 서울의제 21 작성계획을 수립하고 市政開發硏究院에 서울市 지방의제 21 수립에 관한 연구를 의뢰해서 96년도에 지방의제 21 작성의 전제가 되는 서울市 환경기본조례와 환경헌장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금년 3월 5일에는 지방의제 21의 작성원칙에 따라 시민과 기업, 서울市 공동 작성체를 구상한 200명으로 구성된 서울의제 21 추진협의회를 정식 발족하고 서울의제 21 초안을 현재 작성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4월말까지 작성을 완료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후 6월 5일 세계환경의날 기념식에 이를 선포하고 유엔에 제출하겠습니다. 추진에는 차질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끝으로 金錫浩 議員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2회 임시회시에 강동구 둔촌동 산 33번지 일대 자연생태계에 대해서 아직도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자연습지 보호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지하게 답변을 해 주기를 바란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92회 임시회시 이금라 議員께서 질문하신 이후에 우리 市에서는 江東區廳長으로 하여금 자연훼손과 도로개설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도로개설 계획을 유보하고 자연 생태공원 조성방안을 수행하는 방안으로 지시한바 강동구청에서는 도로개설을 유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市의 자연생태공원 조성방안의 수용을 정식으로 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따라서 동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와 전문가의 자문, 유

관부서의 협의,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다음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으며 이달 중에 전문가들이 현장을 답사키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지역이 생태공원 조성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와 주민, 그리고 우리 市, 江東區廳의 의견이 종합되면 바로 공원지정을 하고 강동구에서 도로개설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사유지가 5만 7,000평이 있는 임야기 때문에 기이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인근 길동공원의 보상을 해 주지 않고 바로 신규로 지정한 이 공원을 보상을 해 줄 때 많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320억원이나 소요되는 큰 규모의 공원이기 때문에 생태공원 조성방안은 연차별로 신중히 검토해서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善宰; 環境管理室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建設安全管理本部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安全管理本部長 具惇會; 建設安全管理本部長 具惇會입니다.

鄭炳權 議員님께서 북부 도시고속도로 2공구 및 정릉천 도시고속도로 1공구 등에서 세그멘트를 제작하는 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6개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96년 11월 18일 市議會 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질문이 계셔서 한번 답변드린 바 있고, 또 저희들은 그 이후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

고드립니다.

먼저 철근 겹이음에 대한 점용접으로 인해서 택 웰드라고 합니다. 철근에 과다손상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본 세그멘트 공법에서는철근의 배근, 다시 말씀드려서 철근과 철근과의 간격, 위치 등이 구조상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철근 조립장에서 정밀하게 조립을 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철근과 철근간의 간격 및 겹이음 상태가 서로 이완되지 못하도록 이것을 고정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점용접을 실시하는 것이며, 이러한 방법은 94년도에 建設部에서 발행한 콘크리트교량가설특수공법설계및시공유지관리지침에도 그 세그멘트 제작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조립 완료된 철근망에 대해 감리단에서 다시 한 번 재검측을 한 다음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접자격도 없는 무자격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설안전기술협회 건설안전기술지에도 이런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만, 용접공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와 경력자 중에서 선정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두 가지 항이 있습니다.

본공사에 점용접부분은 구조적으로 중요한 부재의 용접이 아닌 철근과 철근사이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가설용접 작업으로써 유경력자 중에서 선정해 가지고 필요한 교육을 시켜서 세그멘트 조립을 위한 용접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점용접 부위에 대한 철근의 인장강도를 사전에 시험한 결과 기준강도 이상으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공사에서 강교제작 등 구조적으로 필요한, 아주 중요한 부재용접에

는 감리단의 용접에 대한 국제면허를 가진 한국선급요원을 투입하는 등 용접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감리원들이 사전에 설계에 대해서 검토를 제대로 안한다는 그런 지적이 계셨는데 감리단에서는 본공사에 시공자로부터 세그멘트 제작의 착수 전에 시공상세도 및 시공계획서와 계획공정표를 제출받아서 세그멘트 제작에 관한 사항을 국내서적, 외국기술자의 의견 등을 종합해서 검토한 후 승인해서 세그멘트 제작에 착수하도록 하고 있고, 점용접은 감리단에서 시험시공 및 인장시험결과 등을 통해서 이상유무를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제작을 하도록 승인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 검토 없이 설계에 반영하고 국내의 일부 학자들도 철근 겹이음에 대한 점용접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법은 建設部에서 발행한 콘크리트교량가설특수공법설계시공유지관리지침에도 세그멘트 제작시 철근의 조립방법으로 용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경미한 용접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그멘트 설계회사인 스위스의 V.S.L.이라는 회사에서 이미 기술검토에서도 철근위치를 정확하게 고정하기 위한 점용접을 시행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들 현장에서 특히 특별시방서를 무시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본공사의 특별시방서는 91년도에 작성된 것으로써 최근의 기술발전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나라의 서해대교 건설공사 등 결속선 철선으로 묶어서 사용한 서해대교에서 철근을 조립해서 시공한 후 철근의 결속선이 풀려 가지고 교각 철근이 붕괴되는 등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의 서적이라든가 외국인의 자문, V.S.L.의 기술자 검토, 외국의 시공사례 등을 모두 참고를 해서 점용접을 시행하는 것이 결속선을 사용하는 것보다 안전할 뿐만 아니라 세그멘트의 품질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방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점용접한 철근시험결과, 점용접 부분에서 절단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후에 별도로 해 봤습니다만, 시험시 점용접부분에서 절단된 것은 파괴가 이루어지는 극한 상태에서 단면이 변화되는 곳에 응력집중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으로써 시험결과 인장응력이 기준치 이내에 있고, 설계강도는 파괴강도의 1/3정도에 불과한 상태이므로 구조상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철저한 감리감독으로 더욱 내실을 기하여 튼튼한 시설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善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地下鐵建設本部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洪鍾敏; 地下鐵建設本部長 洪鍾敏입니다.

金喜甲 議員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의 환승거리가 멀어 불편한 데 대하여 기존 지하철과 3기 지하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2기 지하철정거장 총 147개 정거장 중에 환승정거장은 39개로서 그중 기존 노선과의 환승은 23개소, 그리고 신설노선간의 환승은 16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하철의 환승계획

은 보행동선의 단순화, 그리고 인지성 제고를 위해서 상대노선과의 사전종합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기 지하철과 이미 운영중인 노선과의 환승은 건설시기 등의 시차에 따라서 역사위치 선정, 출입구 계획, 그리고 기존시설의 개·보수에 있어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건설여건상 한계가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신설노선의 환승은 2기와 3기의 환승거리는 같은 시기에 설계를 할 수 있었으므로 사전설계 단계에서 환승규모에 맞추어 정거장의 위치, 규모, 형태, 출입구 등을 결정하고, 승강장간 직접환승이 가능하도록 보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환승체계를 단순화하여 이용승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중인 3기 지하철 자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전계획단계에서 동선체계의 단순화, 그리고 승강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시민불편의 최소화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金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구조물의 지하수 배출영향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市街地內에는 지하철정거장 뿐만 아니라 대형빌딩에서도 지하수 활용과 시설유지 관리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지하수를 퍼내고는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이로 인한 지반시설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지하수에는 지역 및 지반의 조건에 따라서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市에서는 지하수의 관리 및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하수위의 변화추이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하저터널은 여의도 고수부지부터 마포대교 북측 인터체인지까지 1,288m 구간에 한강 밑바닥에 약 23m 내지 38m 깊이의 단단한 암반사이에 쌍굴로 건설이 돼 있습니다. 터널 두께가 70cm의 육중한 원형 철근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난 84년이나 90년처럼 한강 대홍수 때는 물론이고 한강 계획 최대 홍수위 때 작용하는 1㎡당 54톤 이상의 큰 수압이 걸릴 때에도 안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하저 중앙집수장에서 하루에 약 3,800톤씩을 퍼내고 있는 지하수는 다른 터널구간에도 지하수가 스며나오는 일반적인 현상으로써 터널주변에 암반절리, 말하자면 암반의 틈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암반절리를 통하여 스며드는 물을 모아서 麻浦쪽 지상으로 퍼올리는 것으로써 터널구조물 안전이나 지반침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퍼올리는 지하수는 수량도 많고 수질도 양호해서 가로청소용이나 녹지대 살수용, 소방용수나 인근건물 생활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金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제3기 지하철은 건설재원 확보 후에 그리고 2기 지하철 마무리와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그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철 건설에는 많은 재원과 기술인력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제3기 지하철 건설은 앞서 市長님께서 답변드린 대로 50% 이상 수준의 政府 지원 등 재원대책이 선행한 후에 착공할 예정이며 재원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기 2단계 지하철 건설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

기 위하여 착공 초기에는 지장물 이설 등 본 공사 준비위주로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여 97년부터 추진은 하되 2기 지하철의 주요구조물이 완료되는 단계인 98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3기 지하철에는 議員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소프트웨어의 질적향상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善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內務局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權五虎; 內務局長 權五虎입니다.

金喜甲 議員님께서 교통, 청소 등 역점부서 근무자에게 사기진작책으로 경력가점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와 監査室 직원에 대하여 월 0.04점씩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근거를 물으셨으며, 경력가점을 부여하기 위하여 地方公務員任用令이 개정되어야 한다며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하는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議員님께서 교통, 청소 등 역점시책 추진부서 근무자에 대한 사기대책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서울시 공무원의 경력가점은 地方公務員任用令 규정에 의한 특수지 가점으로서 아동병원, 결핵병원, 수도권 매립지 등 취약부서 근무직원과 행정감사규정에 의한 감사공무원에 대하여서만 근무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공무원에 경력가점을 주는 근거는 大統領令인 행정감사규정에 의해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고, 경력가산점을 주는 이유는 감사업무의 성격상 타 직원이 처리한 업무의 정당성을 감사하는 아주 어렵고도 중요한 업무로서 감사의 기강이 서야 그 기관의 기강이 확립되고 그 기

관이 올바르게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사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감사 담당공무원이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올바른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 地方自治團體 모든 감사공무원에게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교통, 청소분야 근무자에 대하여 경력가산점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上位法인 地方公務員任用令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地方公務員任用令에 두려고 하니까 전국에 있는 교통분야와 청소분야가 전부 다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둘 수 없다는 것이 內務部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우리 市에서는 地方自治團體의 실정에 따라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경력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력가점 부서를 지방자치단체 인사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地方公務員任用令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市에는 올해에도 이 분야에 대한 경력가점에 대한 것을 시정쇄신과제로 채택해서 계속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金錫浩 議員님께서 공직기강 확립방안과 관련하여 事務官 이하 서울市 下位職 공무원들의 봉급을 배로 인상하고 서울시 공직자에 대한 퇴직 후 보장제도를 도입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金 議員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공직기강확립과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공무원의 보수를 배로 인상할 경우에 부정부패 근절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공무원의 보수인상은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타 직종과의 형평성 유지 및 政府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배로 인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국영기업체 보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서 政府에서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처우개선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참고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 대학자녀학자금 융자, 주택자금마련 등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서울市에서도 각종 후생대책을 마련해서 공무원들의 생활의 어려움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퇴직 후 보장제도는 공무원의 퇴직시에 公務員年金法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지급하고 있어 생활안정과 복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퇴직시 봉급을 기준하여 50% 내지 70%의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퇴직연금의 70%를 유족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퇴직 후 보장제도는 재직중인 공무원의 복지수준과 연계되어서 계속해서 인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市에서는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퇴직 후에 민원상담관 등 서울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일부 부여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副議長 李善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財務局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太壽; 財務局長 金太壽입니다.

李容富 議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

니다.

李 議員님께서 松坡區는 경륜장 설치운영으로 교통, 환경, 교육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松坡區에서 위임징수하는 시세인 경주마권세 중에서 3%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것은 너무 적은 배분이 아니냐 하는 말씀과 청소년 시설, 체육시설 등 문화시설 건립과 도서관같은 보상적 차원의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議員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自治區에서 시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징수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自治區의 세목에 관계없이 시세징수액의 3% 징수교부금을 법에 의해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議員님께서 말씀하신 경주마권세의 우리 시세입을 보면 94년도까지는 매우 미미했고 경륜장에서 징수한 1억 6,000만원에 불과했으나 95년도에는 212억원, 96년도에는 545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중에는 경마장 장외발매소 11군데에 대한 수입이 그 동안 과천경마장이 있는 京畿道에 전액을 납부하던 것을 장외소재지에 40%를 납부하도록 우리 市에서건의한 결과 법이 개정되어서 95년도부터 우리 시의 수입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95년도의 212억원 중에는 松坡區에 국한한 경륜장 수입은 69억원이었고 96년도에는 545억원 중에 183억원이었습니다. 징수비용 차원의 징수교부금을 경륜세에 한하여 인상하는 것은 마권세에 장외발매소가 있는 松坡區를 제외한 9개소의 타구와 다른 세목의 시세교부금과의 형평에 맞지 않아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는 곤란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륜장 운영에 따른 자치구 행정수요 유발에 대한 보상

적 차원의 문화시설건립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문제는 특정 사안에 대한 자치구간재정배분에 관한 문제로서 타 자치구와의 형평 등을 감안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안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副議長 李善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監査室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諸他龍; 監査室長 諸他龍입니다.

金錫浩 議員님께서 서울市 공직자의 기강확립을 위해서는 監査室을 市長 直屬下에 두고 監査室 職員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두번째로 江東區 千戶洞의 기부채납받은 토지를 시민들이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監査를 해 달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市에서는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사정활동과 병행해서 공직자의 의식개선, 부조리환경개선, 제도개선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새로운 監査技法의 접근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감사분야에서 개선돼야 할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실 기구의 소속은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통일을 기하여 中央部處는 차관, 광역자치단체는 부단체장 직속으로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기구명칭도 中央部處는 監査官, 지방은 監査室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市 監査室 所屬은 행정을 총괄하고 취약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行政1副市長 직속으로 하여 효율적인 감사활동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구의 소속문제로 監査業務에 특별한 장애가 되는 일은 없으나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독립성을 강조하신 것으로 감사활동에 독립성이 유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적하신 監査 公務員의 전문성문제는 우리 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근본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분류제 등이 도입돼야 하겠습니다만 아직 그런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市에서는 監査公務員의 전보 제한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고, 행정, 건축, 토목 등 13가지 직종에 대해서 업무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엄선해서 자체교육 및 監査院에 위탁 교육도 하고 스터디그룹 활동을 통해서 전문성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監査諮問委員會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한 監査 전, 사전에 전문가와 토론을 해서 監査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해 나가고,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監査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승진 등 전보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시에는 계속 근무토록 하고 근무평정 우대라든지 전보시 희망부처 배치 등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보완책을 강구해서 監査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江東區 千戶洞 산 62번지와 63번지 도로의 형질변경과 관련하여 기부채납받은 토지의 도로개설건에 대한 행정절차와 기타 잘못된 부분에 대한 監査는 빠른 시일내에 확인을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善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保健社會局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朴漢慶; 保健社會局長 朴漢慶입니다.

李英順 議員님이 질의하신 保健所 기능강화와 보건복지정

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市의 보건의료시책 방향은 민간이 담당할 수 있는 일반진료기능은 민간의료기관에 가급적 맡기고 민간이 외면하거나 기피하고 있는 저소득층 진료나 정신질환자 등 특수질환 진료기능을 주로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공공의료분야의 강화가 요청되어 시정운영3개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특수병원은 전문특화병원으로 육성하되 일반진료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일반 종합시립병원은 특수전문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인구증가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설립과 정신질환자를 위한 정신병원 증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保健所에서 주로 수행하는 보건사업은 주로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지역과 대상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건강센터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保健所에서 시행중인 주요 보건사업을 말씀드리면 정신박약아 예방을 위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전 출생아동 약 15만명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금년부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관리는 산전, 분만, 산후관리를 함과 동시에 고위험임부는 특별관리대책을 강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영·유아관리를 위해서는 예방접종시기 지도 등 건강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코저 출생아 가정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 등으로 保健所를 이용해 줄 것을 권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머니들을 위한 자궁암 검사와 모자건강교실도 운영하고 있으며 실명 예방을 위한 취학전 아동 조기

시력검사를 유아원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市敎育廳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보건사업에 대하여는 학교 양호교사, 교과 관련교사, 保健所 및 전문가와 연계해서 성교육, 흡연, 음주, 생활예절 등에 대해서 전년도 약 290만명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서울市에서는 정신보건관리를 위해서 정신보건센터를 江南區 水西洞 1개소를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만 지역의 근접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江西·西大門·城北地域으로 금년에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그 주요한 사업내용으로서는 낮병원, 의원과 정신건강 상담과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질병 대상자별로 성인병교실을 운영하여 자기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노인정 등에는 이동순례진료와 건강상담, 노인 체조교실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5월 26일부터 6월 1일 1주일간을 시민건강주간으로 선정하여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는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市醫師會와 연계해서 당뇨병 심포지엄, 당뇨인 걷기대회, 무료 혈당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실시하던 방문 간호사업도 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방문 진료라든지 방문 간호, 건강검진, 환자관리 등 문제가정에 대해서 행정지원을 하는 등 주민의 욕구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 조기 퇴원자 등을 대상으로는 가정에서 간호원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保健所, 市立病院과 서울市看護師會가 연계해서 가정간호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25개 保健所別로 신혼부부를 위한 건강검진 등 특화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취약지구에 보건분소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2개소의 분소를 합해서 금년 연내에 7개 분소를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99년까지는 전 보건소에 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에 보건소 기동력 강화를 위해서 소형차량 1대씩을 확보해 줄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보건의료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보건지표조사와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용역을 금년말까지 완료할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사업에 李 議員님께서 제안하신 사업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시립병원의 기능강화와 조정이 완료되면 시립병원과 보건소를 4개 권역별로 묶어서 연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다양한 지역보건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副議長 李善宰; 다음은 住宅局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局長 邊榮進; 住宅局長 邊榮進입니다.

住宅局 소관사항으로 金喜甲 議員님께서 목동중심축 도시설계 재정비와 관련하여 여섯 가지 세 항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議員님께서 첫번째로 질문 주신 94년도 현재 서울시에서

지정 운영한 11개 도시설계구역은 목동구역을 포함하여 종로, 세종로, 대학로, 을지로, 신촌, 김포가도, 테헤란로, 종합무역센터, 잠실 및 고덕의 11개 구역입니다.

두번째 질문이 도시설계구역 지정경위를 답변드립니다.

위 11개 구역은 92년 6월 1일자로 개정된 改正 建築法과 92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改正 都市計劃法施行令의 규정에 따라 94년 6월 7일자로 16개 도시설계지구로 나누어 결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목동 중심축도시설계지구도 이때 같이 고시되었습니다.

목동지구의 지정경위를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93년 4월 16일 양천구청
장이 지구지정안을 수립하고, 같은 해 10월 8일 지구지정을 요청하여 다음 해인 94년 6월 7일 서울시고시 94-187호로 결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 주신 내용의 도시설계재정비작업은 93년 6월 18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중심축개발촉진대책을 건의받아 93년 11월 20일 도시설계재정비안을 용역 시행하여 작성토록 결정하였습니다. 그후 94년 6월 16일 양천구청장이 재정비승인요청이 있어서 같은 해 7월 28일 승인하였고, 다시 또 같은 해 9월 15일 구청장이 확정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확정공고는 도시설계지구가 결정고시된 94년 6월 7일 이후로서 도시설계재정비는 합법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네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목동지구도시설계재정비안은 유효하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주신 세입·세출 관계는 목동택지개발사업은 96년 12월 31일 현재 모두 1조 4,246억원이 투자되었고, 또 1조 7,358억원이 세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잉여재원은 신정1교에서 목동중학교 간 도로개설공사 같은 목동지역내 간선시설을 설치하거나 향후 다른 도시개발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기하신 도시설계재정비와 관련한 주민들의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에 따라 대처할 수밖에 없겠으나 우리 시에서는 도시설계 작성의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권한이 있는 경우 충분히 협의검토하여 여사한 민원이 없도록 민원대처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住宅局長이 답변드렸습니다.

○副議長 李善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技術審議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審議官 洪善光; 技術審議官 洪善光입니다.

李英順 議員님께서 각종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바, 이는 시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행정개혁을 하겠다는 시장의 의지와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는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대로 시공되고 준공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술의 한계와 시간과 예산적 제한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불가피한 설계변경과 바람직하지 못한 설계변경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불가피한 설계변경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는 1단계 현장조사 및 계획, 2단계 설계, 3단계 시공의 3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설계변경의 첫번째 원인은 1단계의 과정인 현장조사와 실제 현장여건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되며, 그 구체

적인 원인은 지질, 지하매설물, 지하수 등 지반지질조사가 정확히 조사되지 않아 실제와 달라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조사비와 시간 등의 문제로 100% 정확한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두번째, 공사착공후 예기치 않은 민원발생으로 인한 사업의 규모, 사업 내용의 보완 등의 설계변경과 세번째,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대형공사인 경우 공사기간 동안 설계 당시와 주변 여건이 달라져서 발생하는 경우로, 예를 들면 사토장 및 토사적치부지변경, 운반거리변경 등입니다.

네번째, 관계법령의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 다섯번째, 신공법 신자재 개발로 인한 설계변경, 마지막으로 물가가 변동되는 경우 법적으로 공사계약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되고 물가인상률이 5% 이상인 경우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바람직하지 못한 설계변경입니다.

첫번째로 계획 및 조사의 미숙으로 발생되는 설계변경으로 건축물의 경우에는 운영계획의 부실로 발생되고 있고, 토목구조물의 경우 지반 및 주변 환경조사가 미흡해서 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설계미숙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설계자와 관련공무원의 기술부족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바람직하지 못한 설계변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대부분의 설계변경이 지하 지장물 저촉과 지반지질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에서 기인되었다고 판단하여 지하지반정보시스템의 구축을 기획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학적 시스템이 개발되면 설계변경요인은 상당 부분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미숙에 의한 설계변경을 줄이기 위하여 주요 구조물의 설계시에는 설계감리제도를 시행중에 있고, 공사설계 실무담당자들의 업무수행시 직접 참고하고, 또한 자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설계용역관리편람을 제작 보급하고 있으며, 공사 발주에 있어서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총액계약방법을 확대하여 설계변경 자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설계부터 시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선진국형의 건설관리기법을 도입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서울시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정에 경영마인드가 도입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善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地下鐵公社 社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公社社長 金振浩; 地下鐵公社 社長 金振浩입니다.

金喜甲 議員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난 3월에 아마 金 議員께서 직접 여론조사를 하셔서 저희들의 안전문제를 점검해 본 결과 우리 직원들 사이에 안전에 관한 점수가 60점 이하로 많이 나왔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市長님께서는 지하철의 안전이 몇 점이나 되는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고, 두번째로는 本廳 公報室 주관으로 서울市에서 저희들 공직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데 그 결과는 어떠냐 하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세 가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바쁘신 중에 저희들 지하철 운행에 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여론조사까지 하셔서 좋은 자료를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보다 더 철저하게 안전운행을 시행하라는 하나의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저희 직원들이 모든 신명을 바쳐서 걱정 안 하시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점수가 몇 점이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점수로서 이것을 답변드리기는 매우 곤란하다고 보고, 조금 전에 市長님이 답변드린 것처럼 제 생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이용하셔도 괜찮겠다 하는 소신을 갖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몇 점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기는 매우 어렵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정말 송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지난 1월과 2월에 다섯 번이나 운전장애가 있어서 시민들에게 상당히 염려를 끼치게 되었는데, 地下鐵公社에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95년도는 19건, 그리고 96년도는 16건 이렇게 장애가 났다고 하는데 실제 金 議員에게 제출된 자료는 28건과 27건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 축소보고한 것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16건, 그리고 19건으로 잡은 것은 지하철 운전장애 통계를 위해서 지하철 사고조사처리규정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운행장애기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정거장에서 10분 이상 지연하는 것, 그리고 정거장과 정거장 사이에서 10분 이상 지연하는

것 이렇게 해서 20분 이상 지연되는 사항을 장애건수로 잡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하면 저희들이 市에 제출한 16건, 그리고 19건이 됩니다만, 나중에 질문하신 것처럼 전체 발생이 얼마냐 하면 지금 議員님이 말씀하신 28건과 27건이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 기준을 변경시켜서 장애시간을 20분 기준으로 하지 말고 10분 정도 기준으로 해서 더 정확한 장애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운전장애기준을 좀 조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11건을 목표로 잡았는데 그 목표를 선정한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11건으로 했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장애를 최소화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서울市 경영평가단이 있습니다. 평가단에서 5개년 비선형 분포방식이라는 기준을 정하는 방식에 의해서 금년도 장애건수를 11건으로 정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리해 온 경험치를 기준으로 해서 작년은 16건입니다만, 금년은 11건 목표를 정해서 이것이 최선을 다해서 장애가 안 나도록 해야 되겠다고 정해 놓았는데, 議員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금년초에 벌써 5건이 생겨서 심히 우려스럽고 저희들도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서 이 목표가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관리해 나가고, 다행히 근간에는 또 사고가 안 나고 있습니다.

아까 市長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얼마만큼 성의를 가지고,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장애를 줄이기 위해서 점검하고, 또 운전하면서 주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운전장애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

에 최선을 다해서 건수를 줄이는 데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金喜甲 議員: 公報室 주관으로 여론조사한 결과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대목 중의 하나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 열차와 역사 내의 조명도가 매우 어둡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내 적정조도 기준이 議員님이 알고 계시는 기준과 우리가 보고하는 기준이 왜 다르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 실내 적정조도기준을 한국공업표준규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용하는 기준은 공공시설, 도서관 열람실은 150lux에서 300lux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議員님께서 말씀하시는 300lux는 거실의 독서기준이 300lux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의 차이에 의해서 저희들은 150에서 300lux로 議員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議員님이 알고 계신 300lux는 바로 거실의 독서기준에 의해서 300lux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도도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議員님이 말씀하시는 300lux 기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은 300lux를 기준으로 해서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시 사양서에는 얼마로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

는데 그것은 저희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150 내지 300lux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왜 더 어둡냐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 기구가 낡고, 또 거기에 나와 있는 실내 내장판 시설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들이 2월에 7,312개의 형광등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 기간을 정해서 형광등 기구에 대한 특별정비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특별청소를 한다든가, 성능저하된 형광등은 일체 교환을 한다든가 이런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향후에도 지속해서 노후변색되는 형광등 커버의 교체와 등기구에 대한 주기적인 청소도 시행해서 조도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특히 반사판의 교체 및 고효율 형광등을 채택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더 밝은 분위기 속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 조명관계 걱정하셨습니다만, 22개 역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명기구의 철저한 청소실시와 더불어서 조명설비를 일제정비해 나가도록 하면서 금년에는 2호선에 방배역을 비롯해서 4개역에 대한 개량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하나씩 고쳐나가는 쪽으로 해서 역사를 밝게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사항을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노조관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연말 12월 28일부터 29일간 파업이 있었고 금년 들어와서 1월 15일부터 16일간 파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하철 기능이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걱정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임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지하철이 서서는 안 되겠다, 어떠한 경우라도 회사의 일로, 노사관계의 일로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로 해서 시민에게 불편주는 일이 없도록 어떤 면에서는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파업을 주관한 5명의 간부에 대해서 업무방해로 고발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방해는 조금 전에 副市長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의 결정이지 외부의 압력이나 외부의 다른 조정에 의해서 이와같이 고발하지 않았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기본적인 방향으로 노사관계의 화합이 깨어지는 일은 해서는 아니되고 노사간의 화합을 이룩해서 제반문제를 해결하면서 시민들에게는 불편을 끼치지 않는 그런 운영을 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조와 대화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더욱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대화를 좀더 수준 높게 해서 議員님이 걱정 안 하시는 방향으로 또 시민들이 걱정 안 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사항을 답변을 드리면서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善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都市鐵道公社 社長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都市鐵道公社 社長 尹斗榮; 都市鐵道公社 社長 尹斗榮입니다.

李容富 議員님께서 지하철 무임승차권 발급 개선방안으로 경로우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무임승차자에게 中央政府에서 버스표 지급과 같이 국고보조로 지하철 운임을 보전해서 인적 물적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議員님의 저희 지하철 적자재정에 대한 심려의 말씀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의 무임승차권 지급 대상자는 모두 110만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98만명, 그 다음에 장애인이 10만 4,000명 또 유공자가 1만 6,000명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 지하철과 수도권 전철구간까지 무임으로 운송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는 老人福祉法 제10조 및 동 시행령 제16조에 의해서 지하철은 무임, 다음에 철도청 전철구간은 50% 할인해서 운송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하철공사와 서울市에서 무임운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지원해 주도록 92년부터 中央政府에 계속 요구하고 있으나 保健福祉部로부터 法令에 의한 무임이기 때문에 政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政府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善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中等敎育局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孔貞澤; 中等敎育局長 孔貞澤입니다.

먼저 李英順 議員님께서 청소년들의 입시스트레스, 진학, 향후 진로, 약물중독, 이성관계, 성문제 등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더 이상 교육관계자에게만 맡겨서 청소년 문제가 해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市敎育廳이 과감하게 민간단체들에게 예산을 지원하여 효과적인 청소년 선도를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議員님께서 청소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는 학교 교육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가정, 학교, 사회의 공동노력을 기울일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 동안 저희 敎育廳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다각적인 교육방법으로 청소년 문제 해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남녀혼성반 편성 운영으로 정서를 순화시켜 폭력 충동을 자제하는 안정된 마음으로 건전한 이성관계가 형성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장을 대폭 확충하여 건전한 심신이 단련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장시간의 학습활동에서 오는 중압감과 입시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매일 정규시간 중간에 한 시간 정도를 활용하여 강렬하게 움직이는 시간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하는 어울마당을 운영하는 한편, 획일적인 학교생활의 틀에서 벗어나 소질 잠재능력을 계발하며 인간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몰전 귀가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내외 폭력 및 성폭력의 피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마음놓고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문제와 진로결정, 약물 오·남용과 성문제 등 상담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센터를 교육연구원과 11개 지역 교육청 관내에 금년 3월 3일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언제라도 마음놓고 자신의 갈등과 고민을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교사로서 자격을 갖춘 연구가 깊고 학생지도에 열성적인 교사를 선발하여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상시상담에 응함으로써 학교상담활동의 취약한 기능을 보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일 청소년상담센터 개설 이래 어제까지 현재 학교폭력과 성폭력 피해 및 성문제 등 총 1,327건의 상담이 이루어져 상당한 호응을 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이 청소년 문제 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문직 확보, 상담시설 보완 및 각종 자료 제공, 상담여건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청소년을 위한 사회봉사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사회적인 공동노력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효과적인 청소년 선도를 위해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는 청소년을 위한 민간단체의 도움과 봉사를 적극 유도해 나가면서 민간단체의 지원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李英順 議員님께서 97학년도 실시하는 성교육에 대해 양호교사에게 주로 전담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는데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여성사회교육원 등 여성단체가 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유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연령에 맞는 교육내용을 연구하여 준비하고 있다하니 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위탁교육과 강사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중·고등학생의 성교육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敎育廳에서는 96년도에 초·중·고학생용 성교육지침서를 개발 보급한 바 있고, 또 성교육 교과서를 공식적으로 국내 최초로 만들어 금학기부터 사용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성교육지침서에 따라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연간 10시간을, 그리고 고등학교 2,3학년은 연간 5시간의 성교육을 정규교과이외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교사는 양호, 가정, 체육, 교련, 과학, 윤리 등 교과내용 중에 성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교과 교사 중 지도능력이 있는 중견 교사 중에서 학급별로 전담교사를 지정하여 지도토록 하고 있으며 유능한 자원봉사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문제를 비롯한 청소년기의 잘못된 말 못할 고민을 해결해 주고 도와주기 위해 12개 청소년상담센터를 3월 3일 개소했다는 말씀은 올렸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대책만으로 충분한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여성사회교육원 등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우리 敎育廳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이 점차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올립니다.

金喜甲 議員님께서 중학생들의 고교진학시 내신적용 추진 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할 때에는 예

년에 시행하던 고입선발고사를 시행하지 않고 학교 생활기록부의 성적에 의하여 선발하기로 이미 94년 4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육의 문제와 인성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것이 입학시험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 있으며, 이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방향에도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보기 때문에 고입선발고사는 폐지키로 하였습니다.

선발방법은 학교 생활기록부의 성적을 근거로 교과성적 80%, 비교과영역인 봉사활동 8%, 출석, 특별활동, 행동발달, 성적 각각 4%씩 반영하여 이를 통합한 학교별 석차 백분율에 의하여 선발하게 되며, 이를 위하여 우리 敎育廳에서는 중학교 성적 산출지침을 작성하여 모든 학교에 배부한 바 있으나 敎育部로부터 학업성적관리지침의 변경사항이 다소 있기 때문에 개정작업을 진행하여 4월초에는 학교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 이외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특수목적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 등의 고입 업무추진 일정과 세부계획을 작성하고 처음 시행되는 입시방법에 대비하여 모의시험 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각자의 소질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있으며,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내용과 방법 및 시설의 개선, 전문대학과의 연계지도 등으로 학생들의 유인체제를 보다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학교간, 지역간의 학생의 성적의 차이를 들어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지역이 일부 있겠으나 서울市는 학교간 지역간 차이를 20여년간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해 온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대전제하에 추진된다는 것이며, 비록 일부의 작

은 불만이 있다손 치더라도 큰 길을 걸어나간다는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년에 볼 때 서울市 전체에서 고입선발고사의 탈락학생이 1,900명인 점을 감안할 때 금년에는 그 이하의 학생이 탈락될 것으로 보아 사전에 진로의 선택을 안내하는 등 상급학교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보다 철저한 중학교 3학년 진로지도를 실시하여 학생, 학부모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李善宰;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管理局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金謹鶴; 市敎育廳 管理局長 金謹鶴입니다.

먼저 李成浩 議員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질의하신 서울독립문초등학교의 이전요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成浩 議員님께서는 학구조정 및 학생수용 종합대책 수립계획은 있느냐, 아울러서 현재 학생수용계획에 대한 학구설정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학구조정 및 학생수용계획은 앞으로 재개발사업이나 새로운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는 하시라도 탄력적으로 새롭게 조정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학생수용계획은 서울독립문초등학교가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 서울안산초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을 전부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도 다소 있습니다만, 독립문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학교를 재건축할 시는

인근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판단하고 있고, 학교용지가 부족하더라도 도시지역에서는 학교용지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학교시설설비기준에 미달되더라도 학생수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다소 협소하지만 수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李成浩 議員님께서는 중부교육청의 현재까지 업무추진 자세가 타당하고 올바르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산하 중부교육청에서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독립문초등학교를 재건축 또는 재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하던 중에 李 議員님과 일부 지역주민이 어차피 개축할 경우라면 현재 부지보다 여건이 더 좋은 학교용지가 있으면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李 議員님 등이 제시한 4개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였으나 그 부지에는 특수시설 보호지역이라든지 상수도 배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각종 공사 장애요인이 있어서 부지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따라서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새로운 부지가 제시가 되어서 中部敎育廳 管理局長을 비롯한 關係 職員이 현지를 답사하고 타당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므로 中部敎育廳에서는 주어진 여건하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李成浩 議員님께서는 이후 어떠한 일정과 방법으로 독립문초등학교 이전추진을 계획할 것인가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 傘下 中部敎育廳에서는 기 구성된 실

무추진위원회를 활용해서 현재 제시된 새로운 부지에 대하여는 97년 3월말까지 각종 장애요인 및 학교이전에 따른 제반 자료를 종합적으로 세밀히 분석 검토해서 현재 부지에 개축하는 방안과 새로운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하여 소요경비나 제반 문제점에 대해 비교분석한 후 타당성이 있을 시는 빠른 기간 내에 추진하도록 中部敎育廳에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李成浩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李英順 議員께서 학교 신축과 증축에 따른 잦은 부실공사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첫째로 학교 신축이나 증축에 따른 잦은 부실공사의 방지대책으로 현재 建設技術管理法에 의거 50억원 이상의 공사는 전면 책임감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미만의 공사는 建築士法에 의한 시공감리를 두어 현장에 전문감리자를 상주시켜서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발주청에서는 공사 업무담당자를 임명해서 매몰되는 구조물과 사후검사가 곤란한 시설물은 반드시 현장확인을 하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을 보존하는 등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대책 시행으로 설계된 데 있어서는 부지 현황측량과 지질조사라든지 또한 주변여건 등 기초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시공중에 있어서는 현장 및 감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품질관리계획 또는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토록 해서 발주청에서 지도점

검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공상의 대형 안전사고방지 및 시공 후의 하자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실시공과 하자요인의 원인은 동절기 물공사가 주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절기 기간인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에는 물을 쓰는 공사는 시공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또 하나의 부실공사의 예방책으로서 설계용역시 공정별 설계 참여자 회의를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공사 시공시에 공정별 책임자 회의를 월 1회 이상 실시해서 사전에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실공사에 대한 공사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점차로 줄어들고 있으며, 설계변경의 주요요인을 보면 당초 설계시 지중의 지내력 측정치와 현장굴토의 지반상 이로 인하여 기초구조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학교장 또는 수용자의 요구에 의해 室의 용도변경이라든지 추가설치 등의 각종 시설변경 요인이 있고, 또한 노임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물가의 인상조정으로 인한 변경요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1억원 이상의 공사 중 내역서상 설계물량과 시공물량이 상이하여 정산변경하는 등의 요인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을 줄이도록 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계기간을 충분히 두고 검토해서 현장조사를 보다 철저히 시행을 하고 민원인과의 마찰점과 학교장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하고 설계협의회와 설계도서 검수를 더욱 철저히 검토해서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管理局 所管事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善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執行部側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두 분 議員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金喜甲 議員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喜甲 議員;

오전에 본 질의가 상당히 길게 진행된 점에 대해서 여러 議員님들한테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본 질의 자체가 대단히 길었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本議員은 이러한 本會議 質疑形式 자체가 너무나 요식적이고 의례적인 점이 많이 있어서 관례에 따라 서면답변을 요구한달지 이런 것 자체가 너무나 오래 되다 보니까 과연 이 本會議에서 질의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키신 우리 先輩議員님들이야말로 우리 서울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바로 중심세력이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단히 정말 자부심을 느낍니다.

먼저 本 議員은 公報室 主管의 여론조사가 서울市에서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擔當係長, 課長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3월 15일인가요, 이 때 이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社長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안해 주시고, 그리고 또 있느냐고 제가 의석에서 물어 보니까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인데, 다시 얘기하면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문제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그 擔當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없다고 얘기하니까 참으로 황당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시민상대의 여론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가부간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사실 여기 先輩議員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질의 한번 준비하려면 엄청난 시간을 들이고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해 왔는데 그 질의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답변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서운하고요.

그리고 세번째로 우리 地下鐵公社 社長님께서, 사고장애 건수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20분을 기준으로 해 보니까 그렇고 10분을 기준으로 해 보니까 그렇다, 이런 답변이 사실 나올 줄 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세부내역에서 세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시간을 가지고 10분 이상 기준으로 해서 나온 자료이고, 20분으로 해서 나온 자료가 아니라, 본의원이 세어보니까 20분 이상 건이 95년도에 23건입니다. 그러면 23건이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정확한 준비도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한다는 것 자체는 무책임한 표현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기대를 했습니다. 서울市의 행정의 달인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우리 姜德基 副市長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전혀, 사실 본의원이 물어본 것은 작년 지하철 파업시에 강경대응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였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으시고, 그리고 우리 副市長님의 노조관이 무

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동문서답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행정의 달인으로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하신 명성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적어도 저희 交通委員會에서 향후에 지금 제가 본회의에서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추후에 저희 위원회에서 우리 姜德基 副市長님하고 대화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地下鐵公社 社長님하고도 얘기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동중심축 관련해서 우리 住宅局長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목동중심축의 도시설계재정비의 과정들 자체가 도시설계지구 지정절차를 밟았느냐, 그러면 都市計劃法 제18조와 同法施行令 제16조에 의거한 지구 지정절차를 밟았느냐라고 물었었는데 느닷없이 질의 시작하기 한 1분 전쯤 오셔서 宅地開發促進法의 의제조항으로 해서 가늠했다, 그러면 상당히 그런 나름대로의 내용들에 대해서 본의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住宅局長님 같은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가 아니므로 분명히 별도로 본의원한테 보고하실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李善宰;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鄭炳權 議員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炳權 議員; 鄭炳權 議員입니다.

본의원이 오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북부도시고속도로 제2공구와 그리고 정릉천변 도시고속도로 제1공구에 대한 세그멘트 제작이 잘못되었다. 잘못된 세그멘트를 도로건설에 갖다 시공을 하면 앞으로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하는 질문을 했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市長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本部長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 용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용접도 아니합니다. 철근공장에서 온도를 잘 맞춰서 이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용접자격증도 없는 그런 용접을 하는 과정이,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단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용접을 이렇게 해 왔습니까 했더니 처음 제작할 때부터 자기가 이렇게 용접을 해 왔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 지적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지적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격증이 있습니까 했더니 자격증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감리원을 바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자격증 없는 것을 시인을 하고 이와 같은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용접의 불량스러움이 여기 사진에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불량합니다. 이 세그멘트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도시고속도로 상판분절이 거의 다 세그멘트입니다. 아까 철근이 인장강도가 나오니까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정적인장강도입니다. 그러면 이 철근의 피로강도 사실은 시험을 해 봐야 됩니다. 철근이 그 용접부위에 일어날 수 있는 피로강도는 얼마냐,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를 후반기에도 적나라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建設委員會에 있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市長께서는 세그멘트 제작과 관련한 전반적인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그멘트가 전문관련기관이나 학자들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세그멘트는 폐기처분해야 될 것입니다. 고강도 파이버철근을 마치 산소로 용접하듯이 여기저기 푹푹 패이게, 또 사방에 열을 가해놓고, 그래 가지고 세그멘트 만들어서 그 세그멘트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가령 도시고속도로가 100년이 가야할 텐데 60년이나 70년밖에 못 간다면 이것은 엄청난 우리 市의 손해 아닙니까? 그것은 누가 나중에 책임질 것입니까? 감리원도 문제지만 우리 執行部의 이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도 큰 문제입니다. 감리원들 사실 전면 책임감리라고 해서 감리 맡겨놓으니까 제대로들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감리원들이 한 달이 멀다 않고 교체되고 교체되고 그럽니다. 그것 무슨 감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무자격자 용접사를 고용한 것은 달리 고용한 것이 아닙니다. 임금이 싸기 때문에 고용한 것입니다. 달리 고용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本 議員으로 하여금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해서 후반기에 본격적인 조사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建設委員會에서 일을 못하게 됐고 그래서 이 문제를 지난번 96년도 行政事務監査時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本 議員이 지적한 그 정신이 아닌 다른 방향의 답변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 동안에 서울대교수, 그리고 연세대, 그 다음에 대한토목학회, 그 다음에 대한선급공사 등 많은 전문

가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그 세그멘트, 이미 제작되었습니다만 세그멘트를 전체 다 피로강도 시험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감리나 관련기관, 또는 그와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李善宰; 수고하셨습니다.

鄭炳權 議員님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방금 崔光雄 議員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崔光雄 議員의 신상발언을 들은 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崔光雄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10분임을 이해하시고 시간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光雄 議員; 존경하는 文一權 議長님, 우리 李善宰 副議長님, 그리고 先輩 議員님들, 崔光雄 議員입니다.

이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제92회 臨時會 때 보충질문을 하였으나 시간이 늦은 관계로 답변은 서면답변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회기가 바뀌어서 이번 제93회 臨時會에서 지난번 서면답변서가 本 議員에게 제출되었는데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까 우리 金喜甲 同僚 議員도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식의 시정질문, 이런 식의 의정활동이 계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 역시 의문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임시회 보충질문에서 서면답변을 요구하면서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답변책임자, 그때 당시 行政1副市長을 포함해서 관련 室·局長들이 결재를 한 서면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제가 재삼, 재사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3월 11일자 우리 議長님께서는 직인을 꽝 찍어서 執行部로부터 우리 議會에 제출된 서면답변서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議會에서는 정상적으로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議會의, 우리 서울特別市議會 議長한테 제출된 서울市의 답변서는 서울市長이 제출한 것인지 누가 제출한 것인지 표기도 안 돼 있고, 답변서 자체가 복사본입니다. 속된 말로 어떤 말단 공무원이 적당히 써서 제출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사태를 미리 예견해서 분명히 최소한 局長이 결재를, 우리 서울특별시사무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서면답변서나 자료제출은 室·局長이 市長을 대리해서 전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나는 정당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엉터리 누가 믿어요, 이것을.

오늘 아침에 李容富 先輩議員님께서도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議員들의 요구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행정실명제를 제안하였었고, 오후에 우리 企劃管理室長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지난번에 이것을 요구했었던 사항이고, 구체적으로 한 건에 대해서는 이런 것 했었어야죠.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4번에 걸친 지하철 파업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 서울市 공무원들을 대체투입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地方公務員任用令, 법령이죠. 법령에 분명히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지난번 2월 25일 답변시에는 地下鐵公社 社長께서 나오셔서 우리 市民의 발인 지

하철의 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피치 못하게 이루어진 점, 公社에서 서울市에 요청해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식의 답변을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는 地下鐵公社 社長이 아니라 대체투입을 지시한, 명령한 주체인 우리 서울市에, 그리고 行政1副市長이 우리 인사 이쪽 파트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行政1副市長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촉구한 바 있습니다.

여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市民의 교통운영 체계개선사업 등 교통운영에 관한 사항(서울特別市行政機構設置條例 제12조), 이것은 交通管理室의 분장업무를 지금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교통운영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市 입장에서 지하철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市 직원을 근무시켜 역무가 정상화되도록 근무명령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하철 파업시 우리 市의 交通管理室업무추진을 위하여 근무명령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업무처리는 人事課에서 하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한 가지가 추가된 것이 있는데 뭐가 추가됐냐면 앞으로 업무처리는 人事課에서 하겠습니다. 交通管理室에서 하고, 그 다음에 自治區 公務員들의 업무협조를 받아서 근무명령을 시키기 위해서 주관부서가 自治行政課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던 것인데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는 인사명령이기 때문에, 인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처리는 人事課에서 하겠다고요?

어제인가 그제인가 한겨레신문에서 우리 6급 이하 인사에

대해서는 지금 內務局長이 갖고 있는 인사권을 각 室·局長들한테 다 넘겨줘서 좀더 자율적으로 室·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계획을 서울市가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실제로 각 室·局 내에서 課間, 그 다음에 係間 이런 효율적인 인력배치조차도 앞으로는 室·局長한테 위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근무명령입니다. 제가 지적했던 공식적인 市長이 고시를 하는, 공고를 하는 인사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적근거도 아무 것도 없는 근무명령을 하는 것조차도 앞으로는 人事課에서 업무처리를 하겠다고요? 이런 엉터리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本議員이 요구한 것은 우선은 위법사실 여부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리고 本議員은 그 자체가 아무리 명분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명분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내용과 관계 없이 행정절차가 위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던 것이고, 이 하나의 사안뿐만 아니라 이런 사안들이 여러 차례 本議員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봤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런 전례를 없애자, 행정절차도 민주적으로 하고, 행정절차도 법대로 하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서울市에서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음을 인정을 하고 제가 이것을 違法한 公務員들 명단 밝혀라, 違法한 公務員들 地方公務員法 제48조, 國家公務員法 제56조에 의해서 성실업무 위반을 했기 때문에 징계에 처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진지하게 本議員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해서 그 동안의 절차를 무시하고 違法을 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든가,

아니면 地下鐵이 정말로 중요하고 공익사업장도 중요하다면 파견근무명령을 정식으로 인사명령을 통해서 하든가, 아니면 정식 인사명령이 아닌 기동근무명령 같은 제도를 법제화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기동근무명령도 인사 명령 없이 할 수 있게끔 그런 條例나 이런 데 법제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라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本會議場에서 시정질문하고 답변하고 그 상황만 끝나면 적당히 넘어가도 되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게 되면 밤 늦도록 우리 先輩議員님들, 여러 公務員들 오늘 하루종일 이 자리에 앉아서 수많은 인력들이 이렇게 사장되면서 과연 이런 식의 市政質問 答辯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아주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金喜甲 議員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동안 강력한 소신행정으로 자타가 인정해 온 우리 姜德基 行政1副市長 그래서 이번에 다시 行政1副市長으로 전무후무하게 컴백하셨던 우리 姜德基 行政1副市長님께서 정말로 당당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정말로 企劃管理室長하고 監査室長께서는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내용들이 法的으로 타당한 것인지, 과연 제 지적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法律的 검토, 그 다음에 監査室에서 조사해서 실제로 제가 잘못된 지적을 하였던 것인지 그것을 좀 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行政1副市長께서는 違法 사실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장황한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대중교통수단 우리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어쩌고 하는 그런 답변 필요 없고요. 절차를 違法했는지 안 했는

지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분명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李善宰; 수고하셨습니다.
執行部側의 답변이 성실하지 못한 무책임한 답변이라는 同僚議員들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執行部側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鄭炳權 議員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執行部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建設安全管理本部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安全管理本部長 具惇會; 建設安全管理本部長 具惇會입니다.
鄭炳權 議員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인장강도, 피로강도 시험은 議員님을 모시고 직접 현장에서 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무자격 용접자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접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를 고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아까 제가 建設安全技術協會 기술안전기술지에 따르면, 용접공은 자격 소지자가 있고 자격 소지자 밑에 경력자가 있습니다. 그 경력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자격, 자격증은 없어도 택 웰드라고 그래서 철근과 철근 사이를 피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경미한 용접이기 때문에 경력자 중에서 선정을 해서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중요한 용접에 있어서는 물론 경력자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선급협회에서 나와서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議員님께서 말씀하신 시멘트 전체에 대한 피로강도

시험을 할 것을 제의하신 데 대해서는 議員님을 직접 모시고 현장에서 추후에 날짜를 잡아 주시면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내용으로서는 모두 허용 응력치 이내에 들기 때문에 構造物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아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인장시험에 대해서는 별도로 議員님을 모시고 직접 현장에서 강도시험을 하겠습니다.

○副議長 李善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崔光雄 議員님의 신상발언에 대한 답변은 崔光雄 議員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執行部側에서 적극 참고하셔서 崔光雄 議員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주심과 함께 향후 성실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여섯 분의 議員과 답변하여 주신 關係 公務員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임해 주신 同僚 議員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本會議 休會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각 常任委員會別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제2차 本會議를 마치고 제3차 本會議는 4월 1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8時 散會）

○出席議員　　132人

慶奎福	高光哲	高溶振
郭順英	具哲會	金廣徇
金洛淳	金明炫	金芳林
金相男	金成洙	金成春
金聖浩	金勝建	金勝子
金寧剛	金永俊	金永春
金永姬	金玉源	김장주
金在京	金在仁	金種求
金鍾來	金周喆	金天柱
金亨吉	金喜甲	羅太均
盧永奭	盧載東	魯泰塾
文龍子	文八卦	閔庚燁
閔鍊植	朴謙洙	朴南植
朴德基	朴相根	朴洙桓
朴時河	朴一男	朴贊國
朴贊秀	白南善	白聖德
徐在浣	成聖鏞	宋德華
宋仁回	申坰植	安秉昭
安順德	梁敬淑	梁東錡
梁會善	魚潤慶	呂鼎九
金平洛	禹元植	劉大運
柳德烈	劉俊相	尹福永
尹鍾一	李康玉	李康珍
이금라	李基連	李達源
李斗鶴	李善宰	李成浩

李始英　　李亮漢　　李英順
李容富　　李允中　　李子源
李廷義　　李智文　　林靜枝
林鍾化　　張夏雲　　張壽完
田炳萬　　鄭炳權　　鄭炳仁
鄭福辰　　鄭善順　　鄭水華
鄭在天　　鄭鎭宇　　鄭鎭澤
鄭泰宗　　鄭韓植　　鄭海純
趙上男　　趙旬衡　　池龍鎬
池昌洙　　車星煥　　崔光雄
崔永運　　崔鍾午　　崔昌奎
崔炯莘　　黃炳五　　黃仁明
黃正植　　崔鍾根　　鄭淵甫
黃好淳　　洪樂元　　洪性龍
洪淳喆　　洪承采　　洪月杓
朴正龜　　金錫浩　　金亨根
孫馥　　吳世根　　劉起鍾
金箕英　　文一權　　李聲九
李載震　　張精一　　崔鍾德

○出席公務員

서울特別市

市長　　趙淳
行政1副市長　　姜德基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環境管理室長　　卓秉伍
建設安全管理本部長　　具惇會
地下鐵建設本部長　　洪鍾敏

內務局長　　權五虎
財務局長　　金太壽
監査室長　　諸他龍
保健社會局長　　朴漢慶
住宅局長　　邊榮進
技術審議官　　洪善光
地鐵公社社長　　金振浩
都市鐵道公社社長　　尹斗榮
서울特別市敎育廳
副敎育監　　李元雨
中等敎育局長　　孔貞澤
管理局長　　金謹鶴

書面答辯書

○金喜甲 議員;
(質疑要旨)
목동 중심축 도시설계 재정비 관련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설계지구 지정하지 않은 사유는?
(答辯)
o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따로붙임과 같습니다.
목동 중심축 도시설계 재정비
□ 도시설계 재정비 사유
o 목동 중심축은 당초 서울 서남부 지역의 대생활권 중심지로 계획하였으나 중심축 대부분의 토지가 미매각되어 나대지 상태로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므로 중심축 미매각 토지에 한하여 주요 편익시설의 위치 및 용도를 재조정하고 대규모 필지는 소규모로 분할하는 등으로 재

정비하여 매각 활성화를 유도

□ 도시설계 재정비 추진 경위

o'83.6.28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건설부 고지 제201호)

o'93.6.18 : 목동 중심축 개발촉진 대책 건의(양천구→시)

o'93.11.20 : 도시설계 재정비 용역 시행 방침 결정(시장방침 제1860호)

o'94.6.7 :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서울시 고시 제1994-187호)

※ 도시설계지구지정(택촉법 제11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8조 관련)

o'94.7.13 : 도시설계 재정비 최종(안) 보고(양천구→시)

o'94.7.28 : 도시설계 재정비(안) 승인(시→양천구)

o'94.9.15 : 도시설계 재정비(안) 확정공고(양천구 공고 제133호)

□ 도시설계지구 지정 경위

o목동 중심축은 건축법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90.5.28 서울시 공고 제319호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설계 재정비 당시 도시계획법 제1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6조1호의 규정에 의거 '94.6.7 서울시 고시 제1994-187호(목동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였음.

※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으로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갈음됨.

.....

도시설계지구지정 업무흐름

(뒤에 실음)

……

○金錫浩 議員;

(質疑要旨)

강동구 천호동 산 62, 산 63번지를 형질변경하면서 기부채납받은 토지의 도로개설건에 대한 행정절차와 기타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감사 실시

(答辯)

□ 관련 토지 현황

o위치 : 강동구 천호동 451-161

o면적 : 대지 431㎡(130.38평)

o소유자

- 형질변경전 : 영진약품(주) 김생기

- 현재 : 서울특별시장('93.7.8. 기부채납)

o공시지가 : 517백만원(㎡당 1,200천원)

o용도 : 공공용지(지목 : 대)

※ 지하철공사 현장사무실 〈(주)대림산업〉로 사용허가중

조사결과

Ⅰ. 토지형질 변경 추진경위

o'91.4.26. :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신청(1차)

·신청인 : 구필모 외 4인(강남구 논현동 223-2)

o'91.6.13. : 도시정비자문위원회 가결(강동구)

·공공용지 기부채납 조건(600㎡)

o'91.7.8. : 신청인 위 조건 불수용 종결처리

o'92.4.13. : 토질형질변경 행위허가 신청(2차)

·위치 : 강동구 천호동 산 62, 산 63(지목 : 임야, 면적 : 2,281㎡)

·신청인 : 성동구 성수1동1가 656-230 영진약품(주) 김생기

·도시계획사항 : 일반상업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1종 미관지구

o'92.5.22. : 업무협조 의뢰(강동구 주택과→도시정비과)

·재개발구역 대상지에 인접된 천호대로변 공지(산 62번지 일대)의 개발시에 토지 이상 진입도로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 협조(필요한 진입도로폭 : 10m 이상)

※ '92.2.24. 시(주택개량과)의 재개발구역 지정 요청건에 대한 재검토 지시에 의거

o'92.6.12 : 강동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 개최

·천호대로에 저촉된 토지 64㎡ 및 천호대로변에서 천호6구역 재개발 경계까지 폭 10m, 연장 43m의 공공용지(대지로 지목변경후) 기부채납(총 면적 494㎡) 조건으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심의결정

o '92.7.24. : 토지형질변경(건축물의 건축목적) 행위허가(강동구청장)

·대지 1,786㎡, 도로 64㎡, 공공용지 431㎡

o'93.8.31. :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준공 및 시유재산 취득통보(강동구-시재산관리과)

·강동구 천호동 451-161 대 338㎡

·강동구 천호동 451-160 대 20㎡

·강동구 천호동 451-22 대 73㎡

·강동구 천호동 451-162 도로 64㎡

- 451-161(대 431㎡)로 합병('94.9.28)

Ⅱ.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의 적정 여부

□ 공공용지 확보

o'92.4.13. 영진약품(대표 김생기)이 강동구청장에게 토지 형질변경 행위허가 신청한 천호동 산 62번지 외 1필지(2,281㎡) 토지는 천호대로(B=50m)변에 접한 미개발공지(임야)로 뒷편으로는 천호동 451번지 일대 불량주택 재개발지구 입안지와 접하고 있었으며

o위 신청자인 영진약품은 천호대로에 저촉된 토지 64㎡와 신청 토지의 우측편으로 천호대로변에 약 6m가량 접하도록 하여 400㎡를 공공용지(464㎡-20.34%)로 기부채납하겠다는 조건으로 형질변경을 신청하였는바,

o강동구에서는 '92.6.12. 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심의한 결과

- 천호대로에 저촉된 토지 64㎡를 지목이 도로인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하고

-'92.5.22. 주택과에서 업무협조 요청한 내용을 반영하여 천호대로변에서 천호6구역 재개발 경계까지 폭 10m, 연장 43m(면적 430㎡)를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하되,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주면 재개발측에 혜택을 준다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목을 대지로 하여 기부채납받아서 재개발측이 유상 매수토록 하는 것이 주변 일대의 전체적인 개발측면에서 좋을 것 같다는 자문위원들의 검토의견대로 지목을 대지인 공공용지로 하여 기부채납(총 면적 495㎡-21.7%) 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o이는 서울특별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 제4조(허가기관)에 의거 위 행위허가는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항으로, 동 요령 제12조(공공용지의 확보)에 의하면 "공공용지는 신청토지 면적을기준하여 20%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할 수 있

도록 적정한 크기의 규모로 하여 신청토지내에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 재개발구역 진입도로를 사전 확보하여 향후 재개발측에 유상매수토록 하기 위해 신청토지 면적의 21.7%인 공공용지를 폭 10m, 연장 43m 인 도로모양으로 기부채납하는 과정에서 관련 지침 등에 위배한 사실은 없음.

□ 공공용지 분할의 적정 여부

o위 건 토지형질변경 신청토지는 '92.7.24. 행위허가 및 '93.5.17. 지적분할에 의거

- 천호대로에 접하도록 폭10m, 연장43m의 도로모양의 공공용지(천호동451-161 대 431㎡)가 분할되었는바,

o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행위등의 제한) 제4항제2호에 의하면 "건축법에 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o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 제27조에 의거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하고

o1종 미관지구에 있어 건축물의 규모는"건축물의 앞면 및 옆면 길이가 각각 18m, 9m이상"이어야 하며

o대지 최소면적은 위 신청토지가

- 일반 상업지역 및 1종 미관지구로서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330㎡(20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이고

·1종 미관지구의 경우는 600㎡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o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및 공용지로 하고자 분할"하는 경우는 도시계획법에 정한 「행위등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되어

있 으므로

- 위 건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시 폭 10m, 연장 43m로 분할하여 기부채납받은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공공용지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

o서울특별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 제11조(시설기준)에 의한 대지 조성시의 시설기준에 의하면 "도로는 완전히 포장하여 개설하여야 하고, 하수도에 관한 설치기준에 맞도록 하수도의 관로, 맨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위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행위허가시 향후 인접 재개발구역의 진입도로로 유상제공할 목적으로 지목이 도로가 아닌 대지로 기부채납토록 함으로써, 수허가자인 영진약품(주)에게 도로개설 및 포장, 하수도설치 등의 관련 규정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울 수 없도록 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 이는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을 받았을 경우 재개발조합에 특혜를 준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동구 도시정비 자문위원회의 결정으로 판단됨.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o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90.3.2) 제4조(대상사업)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대상 면적은 3,300㎡(1,000평) 이상 토지이고, '92.8.25. 개정된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대상 면적이 1,650㎡(500평) 이상인 토지로 확대되었는바,

- 동법 제9조에 의한 부과기준 시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

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확정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확정되는 날은 행위허가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 건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일은 '92.7.24.이므로 '92.8.25.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따라서 본 건의 경우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대상 면적은 3,300㎡ 이상 토지이므로 이 건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

□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심의 적정여부

o강동구 천호동 산 62, 63의 토지형질변경 사항은 당초 '91.4.26. 구필모 외 4인이 신청하여 '91.6.13. 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에서 공공용지 600㎡를 기부채납 조건으로 행위허가토록 의결하였으나

- 위 신청인이 이를 수용할 의사가 없어 '91.7.8. 위 건 행위허가 업무는 자동 소멸하게 되었으며,

- 그 후 위 토지를 '92.1.10. 매수한 영진약품(주) 김생기가 동 행위허가를 '92.4.13. 신청하여 옴에 따라 '92.6.12. 구 자문위원회를 다시 개최한 것으로써, 동 위원회에서 1차 심의후 만 1년 후에 동 건을 재심의한 것은 서울특별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에서 정한 재심의 제한기간(6개월)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o 또한 동 요령 제12조에 의하면 "신청토지 면적의 20%이상을 공공 용지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이 때에 공공용지는 건축법에 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해당토지는 1종 미관지구로서 600㎡)기준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위 행위허가건을 심의할 구 자문위원회에 상정하는 심의(안)에는 위와 같은 대지면적 최소한도 기준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 동 위원회에서 이를 충분히 검토.심의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92.6.12. 동 위원회에 보고된 심의(안)에는 이같은 사항을 누락시킨 채 재개발구역 진입로 확보사항만을 포함시켜 검토되게 함으로써 1차 심의결정시(600 ㎡)보다 공공용지를 적게 기부채납(495㎡)받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음.

□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관련 특혜 여부

o위 행위허가 수허가자인 영진약품은 허가조건에 따라 재개발구역 진입도로 목적의 폭 10m, 연장 43m(면적 431㎡)의 대지(지목상)를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함으로써

- 영진약품이 당초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하겠다고 신청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 수허가자가 부담하여야 할 도로포장 및 하수관 설치 등 부대시설을설치할 의무가 지워지지 않게 되었으며

-'91 년도 1차 심의 결정시(600㎡)보다 공공용지를 적게 기부채납(495 ㎡)하게 되었는바,

o이와 관련하여 당시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를 처리하였던 담당자(토목7급 장형상)와 도시정비과장(토목5급 정준영)에 대하여 조사한바,

-'92.6.12. 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 회의시 관련 토지현황 및 '91년 1 차 심의결정 내용과 수허가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 배경설명을 한 바 있으나,

- 동 위원회에서는 재개발구역 진입로 확보에 중점을 두고 검토가 이루어진 결과, 공공용지 확보조건인 20%이상 조건에 맞도록 진입로를 기부채납토록 결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 이 건 형질변경과 관련 수허가자인 영진약품으로부터 향응이나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

으며

o당시 영진약품의 실무 책임자였던 관재부장 전형수와 면담한바,

- 영진약품으로서는 신청 토지내에서 어느 곳을 기부채납하든 간에 후일 해당 토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기부채납조건 등과 관련하여 어떤 혜택을 입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며, 당초 기부채납하겠다고 신청한 공공용지 면적 464㎡보다 31㎡가 많은 495㎡를 기부채납한 것이므로 오히려 자신들로서는 손해를 봤다고 말하고

- 또한 형질변경시 구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공공용지를 분할하여 지목을 대지로 기부채납하게 된 것으로써 허가조건을 유리하게 해 달라고 구청측에 청탁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o이 건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수허가자인 영진약품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의 기부채납을 하게 한 것으로 보여져 특혜의혹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와 관련, 관계 공무원들과의 유착 여부는 행정조사상의 한계로 확인할 수 없었음.

Ⅲ. 재개발구역 진입로 처리 적정여부

□ 천호6구역 주택개량재개발 사업개요

o위치 : 강동구 천호동 451번지 일대

o면적 : 19,295㎡

o규모 : 지하2층, 지상15~24층 아파트 649세대 및 복리부대시설

o공정 : 15%(지하층 골조 공사중)

□ 재개발사업 추진경위

o'92.11.26. : 재개발 구역지정(건설부 고시 623호)

o'93.9.27. : 재개발구역 추가지정(시장)

·진입로 431㎡(시유지) 추가 편입

o'93.12.30. : 사업계획 결정(시장)

·도로 : 1,999㎡(진입로 431㎡ 포함)

·공공용지 : 399㎡

o'95.1.4. : 재개발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강동구청장)

o'96.6.21. : 관리처분 계획인가(강동구청장)

·도로 : 2,062㎡

·공공용지 : 434㎡

·환지(단독택지) : 291㎡

□ 진입로 처리경위

o'91.3.20. : 재개발구역 지정요청(강동구→시 주택개량과)

o'92.2.13. :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구역지정안 보류(서울시)

·천호대로변 공지의 토지이용 및 진입도로 문제 등 검토 필요

o'92.2.24. : 구역지정 재검토지시(시 강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검토요구사항 통보

o'92.5.22. : 업무협조 의뢰(구 주택과 도시정비과)

·재개발구역 대상지에 인접된 천호대로변 공지(산 62번지 일대) 개발시 토지이용상 진입도로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 협조(필요한 진입 도로 폭-10m이상)

o'92.6.12. : 도시정비자문위원회 개최(강동구)

·산 62 외 1필지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천호대로변에서 재개발 경계까지 폭 10m, 연장 43m의 공공용지(대지로 지목 변경후) 기부채납 결정

o'92.6.15. : 각서 제출(재개발 추진위원회 강동구)

·산 62 외 1필지 토지개발시 진입도로 목적의 공공용지

(대지)가 확보되면 시로부터 유상 매수하여 진입도로로 사용할 것임.

o'92.7.11. : 구역지정 재검토자료 제출(구→시)

·토지형질변경시 공공용지가 기부채납되면 조합측에서 매입하여 진입도로 확보할 것임.

o'92.9.17. :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구역지정안 가결(서울시)

o'92.11.26. : 재개발구역 지정(건설부 고시 제623호)

·진입로 부분(시유지) 미포함

o'93.5.17. : 조합원과의 간담회(반충남 강동구청장)

·100평 이상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면 진입로와 교환가능('93.8.30. 제4회 조합측 대의원 회의록에 기록)

o'93.9.27. : 구역추가 지정(진입로 부분 추가 편입)

o'93.12.30. : 사업계획 결정(실시)

·도로 : 1,999㎡(진입로 431㎡ 포함)

·공공용지 : 399㎡

o'95.1.4. :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강동구청장)

·진입로(시유지)는 보존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도로(공공용지)를 개설 사용하는데 따른 절차는 재산관리청의 의견에 따를 것

o'95.3.24. : 재개발 사업지구내 도로개설에 따른 민원보고(강동구→시 재산관리과)

·시유지를 조합에서 도로로 개설 사용하는 대신 조합소유 토지(692㎡)를 서울시에 관리처분

o'95.4.4. : 민원회신(시 강동구)

·재개발구역내 공공시설은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으므로 구에서 시유지를 매수하여 도로개설

o'95.4.13. : 진입로 처리방안 검토보고(구청장 방침 664호)

·시유지(진입로)와 재개발조합 소유토지 교환(교환으로 인한 가격차이는 조합측에서 부담)

o'95.10.10. : 진입로 개설방안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 검토회의(부구청장 주재)

·구에서 진입로 매입후 도로로 개설하되 조합 소유 토지 725㎡를 구에 기부채납

o'96.6.20. : 재개발구역내 진입로 처리대책 보고(구청장 방침)

·구에서 진입로 매입, 조합에서 도로 개설하고 공공용지 등은 구에 기부채납

·소요예산은 '96추경예산에 반영

·구유지 관리계획에 반영(의회 승인)

o'96.6.21. : 관리처분 계획인가(강동구)

·진입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구청 매입) 반영 및 의회 승인 요청 결과에 따를 것

·진입로사용가능시 단독택지(291㎡)를 추가 기부채납하고 공공용지(434 ㎡) 및 단독택지(291㎡)의 평가액과 진입로 평가 차액은 조합부담

o'96.10.4. : 시유재산 매수신청(강동구→시 재산관리과)

o'96.11.9. : 구매재산관리계획 제출(구→강동구의회)

o'96.12.19. : 시유지 매입예산(계약금) 삭감 확정(강동구의회)

·2억→2,000만원

o'96.12.23. : 시유재산 매매계약 체결 통보(시→강동구)

·5년 분할납부(매각대금 1,1343백만원)

o'96.12.27. :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상임위 재회부) 및 조사특위 구성(강동구의회 7차 본회의)

o97.2.20. : 상임위(내무위원회) 심의(강동구 의회)

·특위 조사결과에 따라 재심의

o'97.2.24. : 재개발 진입도로 무상사용 요청(강동구→시)

o'97.3.17. : 무상사용 불가 회신(시→강동구)

□ 재개발구역 진입로 확보의 적정 여부

o이 건 재개발구역 진입로는 '92.2.13.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 구역지정안 심의시 진입도로 문제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되면서 최초로 진입로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92.9.17. 동 위원회는 '지구앞쪽 토지를 구청에서 형질변경해 주면서 진입도로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조치되었다'는 검토결과에 따라 위 구역 지정안이 가결된 것으로

- 동 위원회가 진입로 문제를 검토하도록 한 것은 법규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변 지역의 도로사정과 교통문제를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이나,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와 시·구청 관련 공무원들과 이 건 토지형질변경 수허가자(영진약품)와의 유착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조사의 한계상 확인할 수 없었음.

o또한 이 건 진입로와는 별도로 강동구에서는 천호6구역 재개발지역을 통과하여 천호대로에서 거여동길을 잇는 폭 10m, 연장 240m의 도시계획도로를 '94.5.16. 결정고시함으로써 사실상 이 건 시유지 진입도로의 필요성이 다소 저감된 것은 사실이나

- 위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게 된 추진경위가 '91.4.8. 서울시의 재개발구역 지정요청에 대한 재검토지시에 의거 천

호동 452-45번지 일대 맹지발생 등의 민원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91.9.19. 구 도시정비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현황도로를 6m로 확장하여 도로를 확보토록한 바 있고

- 이에 재개발조합에서는 강동구에 '93.10.9. 재개발사업계획결정을 요청하면서 폭 6m, 연장 115m의 공공시설(도로)을 설치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이 과정에서 당시 반충남 구청장은 시유지 진입로를 조합측이사용할 수 있도록 약속한 것으로 판단됨)

- 위 사업계획 결정을 위한 유관부서(도시정비과 등)와의 업무협의과정에서 도로폭을 10m로 확보하도록 검토되고 조합측이 이를 수용한 결과 '93.12.30. 서울시의 사업계획 결정시 폭 10m, 연장 115m의 공공시설(도로)로 결정되었는바,

- 도시계획결정 주관부서인 구 도시정비과에서는 위 구역 내 도로(B=10m, L=115m)를 포함하여 천호대로에서 거여동길간 도시계획 도로(총연장 240m)를 '93.11월경 입안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4.5.16.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였으며

- 조합측은 이 건 시유지를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대신 도시계획도로중 재개발구역내 저촉부분 1,081㎡를 포함하여 총 1,631㎡의 공공시설(도로)과 공공용지 등 725㎡를 강동구에 무상귀속(기부채납)시키도록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 결국 위 재개발구역은 천호대로변 쪽으로 2개소의 진입로를 확보하게 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시유지 진입로와 도시계획도로의 설치 경위 및 배경이 각각 상이한 데서 비롯된 것임.

□ 유상 매수각서의 적정 여부

o 천호6구역 불량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명의로 '92.6.15. 강동구(주택과)에 제출한'진입도로 확보시 유상 매입하겠다'는 각서의 효력은

-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92.8.5.) 제14조에 의하면 '재개발 구역내에서 재개발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재개발조합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 이 규정에 의거 위 설립위원회(위원장 안형준)는 '93.2.11.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 승인을 받았으며, 동 설립위원회의 규약에는 '이 규약이 통과되기 전에 추진위원회가 결의하고 집행한 사항은 이 규약에 의거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 이 이외에 추진위원회의 법적 효력 및 의사결정 방법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위 추진위원회가 작성 제출한 각서는 유효하다 할 것임.

□ 사도개설 허가 이행 여부

o 사도법 제4조에 의하면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 건 시유지 진입로는 '93.9.27. 재개발구역으로 추가지정되고, 동년12.30. 사업계획결정에 의거 공공시설(도로)로 결정되었으므로

- 이 건 진입도로 개설은 도시재개발법 제65조의2(공공시설의 설치) 규정에 의거 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고, 동법 제57조에 의하면'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조합측이 이 건 시유지를 매수하여 포장 등 도로 개설하는 것이 원칙이고, 더구나 '96.6.20. 「재개발구역내 진입로 처리대책」 방침(강

동구청장)시 진입로는 구에서 매입하되 도로개설은 조합에서 하고 기타 공공시설도 시설 설치후 구에 기부채납하도록 결정한 바와 같이

- 이 건 시유지 진입도로의 개설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사업 시행자가 개설토록 결정된 것임.

□ 재산관리부서와의 사전협의 이행 건(강동구)

o'92.6.12. 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가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신청과 관련 서울시의 구역지정에 대한 재검토 지시사항('92.2.24.)을 반영하여 재개발 진입도로 확보 목적으로 기부채납토록 심의결정한 공공용지(지목 대)는 '93.7.8. 시유재산으로 기부채납되어 '93.10.7. 보존재산으로 분류된 토지로서

- 강동구에서는 위 서울시의 재검토 지시에 대한 자료를 '92.7.11. 제출하면서 '92.6.15. 천호6구역 불량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주상호)가 제출한 진입로(시유지) 확보시 유상 매입하겠다는 각서를 근거로'토지형질변경시 공공용지가 기부채납되면 조합측에서 매입하여 진입도로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하였는바,

o 「국·공유재산 사전협의이행 강조지시」(재산 45500-3404, '94.12.7.)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시설(변경)결정 등과 관련하여 국·공유재산이 그 사업구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에게 사전 협의하여 그 재산의 처분(매각 등)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계획 결정 등을 요청하여야 함에도

-'93 년 당시 반충남 구청장은 위 재개발구역내를 관통하는 도시계획 도로(폭 10m)를 개설할 목적으로 토지형질 변경시 기부채납된 토지(대)를 진입로로 조합에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대신

- 위 도시계획도로 개설건에 대한 구청 의견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여 조합측이 이를 수락한 사실이 있는바(당시 주택개량계장 이석주 진술 및 조합측 회의록)

- 이 경우 강동구에서는 위 진입로(시유지)가 무상사용이 가능한 재산인지의 여부를 관련기관 등과 협의하여 진입로 처리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 시지에 대해 구역 추가지정 요청(진입로) 및 사업계획 결정을 시에 요청하는 등 사전 협의를 소홀히 하였음.

□ 진입로 처리대책 추진 건(강동구)

o'95.3.24. 강동구청이 조합측에서 제출한 "시유지를 도로로 개설 사용하는 대신 조합소유 토지(692㎡)를 서울시로 관리처분하고자 한다"는 민원을 시 재산관리과에 제출하자

-'95.4.4. 시(재산관리과)에서는 상기 조합측 민원사항에 대해 지구내 진입로(시유지)를 구에서 매수하여 도로로 개설토록 지시하였는바,

- 구에서는 '95.10.10. 주요업무추진 검토회의(부구청장 주재)를 개최하여 진입로를 구에서 매입하되 도로는 조합에서 개설하기로 결정하고도

- 매입예산 편성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8개월 뒤인 '96.6.20.에야 재개발 구역내 진입로 처리대책 방침(구청장)을 다시 받은 후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하는 등

- 재개발구역 진입로 처리대책 추진을 지연시킨 사실이 있음.

□ 재개발구역 진입로(시유지) 무상양여에 대하여는

o 시유재산 관리부서(재산관리과)에서 법률적.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조치할 사항임.

조치의견

o이 건 질의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강동구는

-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시 심의 등을 소홀히 하고

- 재개발사업 추진시 관련기관 등과 사전협의 이행을 소홀히 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적출되었는바,

o위와 같이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아래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자 하며

o재개발사업 추진시 관련기관 등과 사전협의 이행을 소홀히 하고, 재개발구역 진입로 처리대책 추진을 지연하는 등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강동구청에 통보하여 주의촉구토록 하고

o재개발구역 진입로(시유지) 무상양여 가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재산관리과)로 하여금 법률적·정책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처리토록 통보코자 함.

.....

조치의견

(뒤에 실음)

.....